

2011년 업무계획

보 고 서

녹색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

#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10. 12. 27.

 환경부

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I. 업무 성과 및 한계 .....           | 1   |
| II. 2011년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.....   | 13  |
| III. 주요 정책과제 실천계획 .....       | 17  |
| 1. 기후변화 대응 .....              | 19  |
| 가.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 .....          | 19  |
| 나. Me First 운동 확산 .....       | 23  |
| 다. 4대강 살리기와 물 관리 선진화 .....    | 27  |
| 라.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.....         | 33  |
| 2. 녹색성장 견인 .....              | 36  |
| 가. 물산업 육성 .....               | 36  |
| 나. 생물자원 확보·이용 .....           | 42  |
| 다. 자원순환성 제고 .....             | 46  |
| 라. Top 환경기술 개발 .....          | 52  |
| 3. 사람·환경·시장의 조화 .....         | 55  |
| 가.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 .....      | 55  |
| 나. 환경규제 선진화 .....             | 71  |
| 다. 환경법질서 확립 .....             | 79  |
| 라. 환경거버넌스 구축 .....            | 84  |
| <붙임> 1. 2011년 주요정책 추진일정 ..... | 93  |
| 2. 2011년 주요 입법계획 .....        | 103 |
| 3.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.....      | 108 |





# I. 업무 성과 및 한계





# 1. 업무 성과

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정책 추진

○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('08.8.15) 선언,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발표('09.11), 제15차 기후변화총회(COP15)에서 **Me First** 실천 촉구,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·시행('10.4) 등 정책목표 및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

\*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개소('10.6), 자동차 온실가스 고시안 입법예고('09.7),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 목표관리제 도입('10.9, 관리업체 선정), 전기차 등 그린 카 보급, 친환경건축물 환경개선부담금 경감('10) 등 대책 추진

○ 저탄소 사회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구축, 산업구조의 개편 등과 병행하여 **非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본격화**

\* 녹색생활 실천을 주도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확대(전국 4,200여 기관·단체 참여), 탄소포인트제 200만 회원 가입('10), 친환경운전 캠페인, 그린리더 양성('10, 1만 명) 및 그린캠퍼스 확산 등 추진

○ 온실가스·대기오염물질 및 기상정보의 통합적 감시·관측, 대기질 개선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병행 추진

\* 관측시설의 통합·연계 운영 및 기관 간 정보공유, 통합적 모델링 구축, 그린 카 보급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·온실가스 동시 저감효과 도출

② 환경 친화적 생산·소비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·제도 정비 및 시장의 변화 유도

- 녹색구매 촉진대회 및 녹색제품 인증 확대를 통한 녹색소비 촉진,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('10), 녹색기업 지정('10~) 및 녹색금융 지원 DB구축('09~) 등을 통한 시장영역의 변화 유도

\* 공공기관 친환경상품구매 증가('05 0.8조 → '10 1.6조원) 및 환경마크인증 제품 확대('05 2,721개 → '10 7,800개), 금융권과 공공기관 공동으로 녹색투자 펀드 조성·추진

### ③ 지역·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및 양자·다자간 환경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그린 리더십 확보

- 환경협력 MOU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, UNEP, UNESCAP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녹색성장 전략의 국제적 확산 및 개도국 역량지원 프로그램 확대

\* 환경협력협정 및 MOU 체결('08 36건(3개 국제기구 25개 국가) → '10 48건(3개 국제기구, 35개 국가)), 한·중남미포럼('09, '10) 및 한·아프리카 포럼('09, '10), UNEP 공동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('10.4, B4E), 녹색성장 서울이니셔티브(SI) 확대 및 녹색성장 전략 공유

### ④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물 관리 및 유역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물 관리 분야 과감한 투자 실행

- 수질개선, 수생태계 회복, 수량 확보, 유역·친수공간 창출·관리 등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환경대책 추진

-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전환('10 법적 근거 마련)으로 주요 공공수역의 사전 예방적 물 관리를 위한 제도 완비

- 환경투자 확대 등으로 공공수역의 수질(BOD) 관리 및 개선

\* 환경개선 사업비 : '07 3.1조원 → '09 3.9조원 → '10 4.3조원

- 지자체, 지역주민 및 산업계의 참여·협력을 통하여 지역 하천의 수질개선 및 도심복개하천의 생태 복원

\* 산업체, 공공기관의 1사 1하천운동 확산 등



⑤ 상하수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, 시장원리에 입각한 상하수도 서비스 효율화 및 물산업 육성 추진

- 상하수도 분야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전국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

- \* 상수도보급률 : '05 90.7% → '10 94.1%

- \* 하수도보급률 : '05 83.5% → '10 89.8%

- 막여과 등 정화처리기술 개발 등으로 하·폐수 처리능력 개선 및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

- 상하수도 서비스에 시장원리 및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수도 사업자의 통합·광역화와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, 물 전문기업 및 물산업 육성·지원

- 물 재이용 촉진·지원법 제정('10)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

- 토양·지하수 환경관리 및 오염정화기준 강화, 먹는 물 관리 제도 정비,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등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·사업 발굴·추진

⑥ 국토 및 자연환경을 국가발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환경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

-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·규제 위주의 소극적 관리정책을 탈피하고,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적극적 정책기조로 전환

- \* 순천만 갯벌, 천수만 철새도래지, 우포 습지 등 우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관리 강화, 생태관광 활성화,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및 점봉산·계방산 국립공원 편입

- 한반도 자생생물자원을 조사·확보하고, 국립생물자원관 개관('08), 국립생태원 건립 착공('10) 등 생물자원의 보호·이용기반 확충

7] 폐기물 감량, 재사용·재활용·에너지회수를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의 자원순환성을 제고

- 4R(Reduce·Reuse·Recycle·Recovery)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, 폐자원·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투자 확대
  - \* 생활폐기물 재활용률('05 56.3% → '09 61.1%) 및 폐기물 에너지화율('05 0% → '10 3.1%) 제고, 폐자원에너지화 기반시설 확충('10, 30개소),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CDM 사업('10.5, 배출권 1차분 72억원 확보)
- 국민·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본격화
  - \* 폐휴대폰 수거캠페인(106만대 수거·재활용, '10), 주요 발생원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 및 가정·유통업체 대상 홍보·캠페인

8] 생활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로 매체(오염물질, 폐기물 등)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단계적 전환

-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추진('08~), 환경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('08~), 석면피해구제법 및 하위법령 제정('10),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체계 구축 본격 착수
  - \* 서울 미세먼지 환경기준 처음으로 달성( $48\mu\text{g}/\text{m}^3$ )

9] 서민과 환경취약지역을 배려하는 친서민 환경정책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

- \*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긴급지원('10, 예비비 225억),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 무상지원('10, 3천가구),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바우처 제공('10, 6천명) 등

## 2. 한계 및 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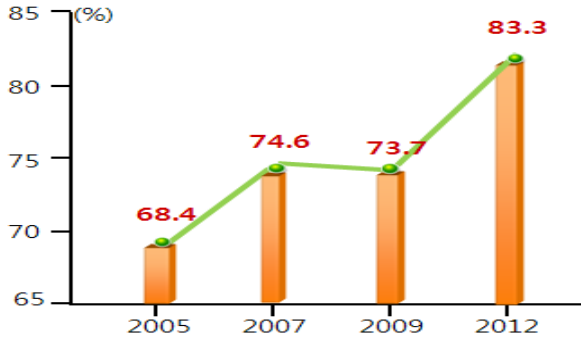
- ① 녹색성장을 위한 법·제도 정비, 중·장기 계획 수립 등 기반 구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새로운 제도·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한계 존재
-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 및 정책수단 등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,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존재
  - 경제 주체들이 녹색생활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은 주저하는 인식과 행동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,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센티브 수단 등은 미흡
- ② 지속적 투자로 환경 인프라 확충 및 환경지표는 개선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형 환경관리 지표는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
- 4대강 등 하천의 BOD는 양호하지만, COD, TOC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
  - \* 하천의 유해·독성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은 여전히 미흡
  - 수도권 등 대도시의 미세먼지, 황산화물 농도는 가시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, 선진국형 관리지표인 질소산화물, 오존의 뚜렷한 개선성과는 미흡
  - 국민 혈중 수은농도가 선진국 보다 높고, 생산·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의 생산·관리, 국가생물종의 확보·이용기반은 선진국보다 미흡한 수준

- 환경요인과 건강피해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 **환경보건 분야 명확한 책임관계 설정 곤란**
- 국민들의 **수돗물에 대한 불신**이 여전하며, **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아** 상하수도 확충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투자여력 부족
  - \*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1.4%에 불과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 만연
  - \*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610원/톤으로 원가 762원/톤 대비 80% 수준에 불과('09) 하며, 수도요금의 지역 간 격차도 큼
- 도시지역의 환경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나, **농어촌, 도서지역 등 환경서비스 취약지역의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**
  - \*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51.0%로 전국평균의 93.5%에 크게 미달('09)
- 수도 사업 구조개편, 병입수돗물 판매, 물산업 육성에 대한 **선제적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**
- 생활오수 위주의 하수관거 보급으로 **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 등 하수관거의 빗물 처리능력 부족**
- 경제성장, 인구증가, 도시화 확대 등 개발수요 증가로 농지, 갯벌, 산림면적이 감소하고, 보호지역 면적도 **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**
- 폐자원 에너지화, 하수슬러지 자원화 등 폐자원 관리정책의 **전환 및 신기술·공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발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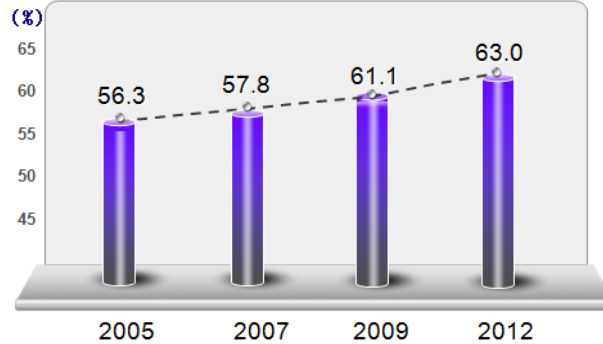
[참 고]

지표로 본 환경정책 성과 및 현 좌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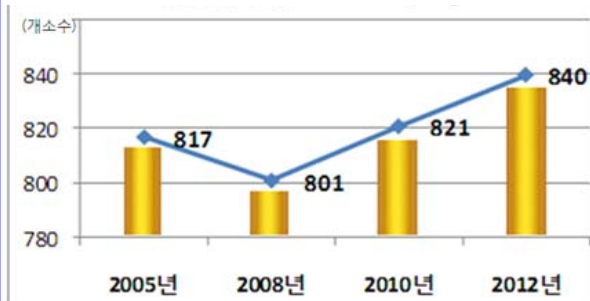
<공공수역 좋은 물 비율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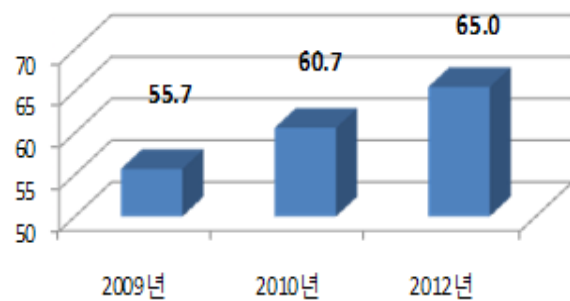
<생활폐기물 재활용률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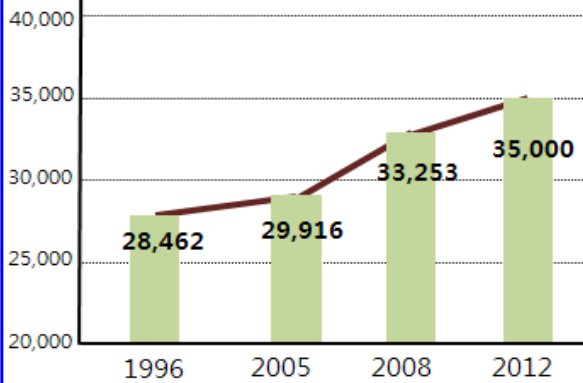
<자연환경보호지역 개소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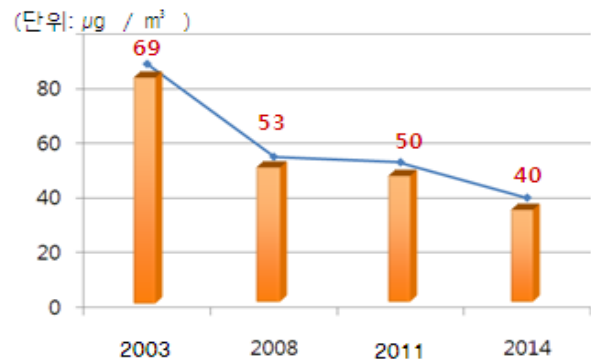
<국민 생태관광 인지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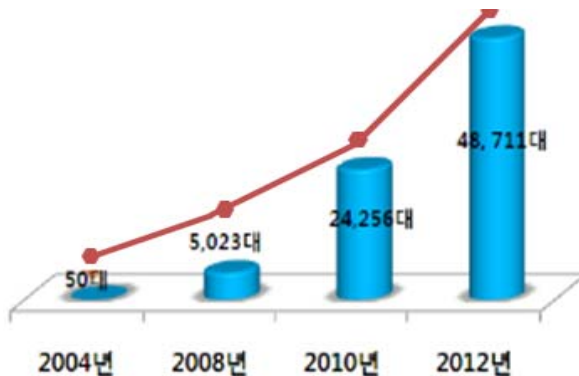
<한반도 기록 생물종 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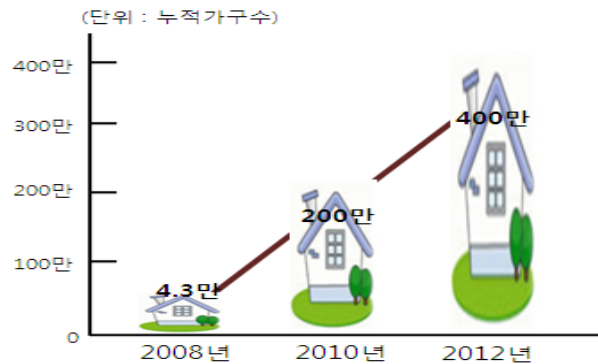
<수도권 미세먼지 농도>



<저공해 자동차 보급대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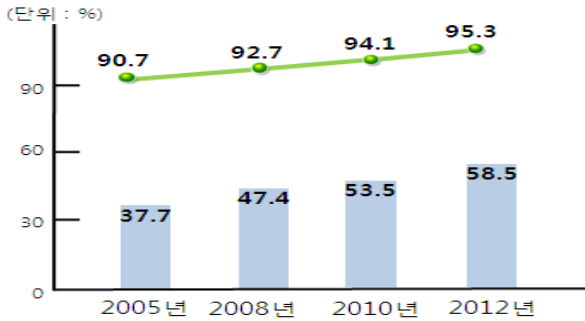
<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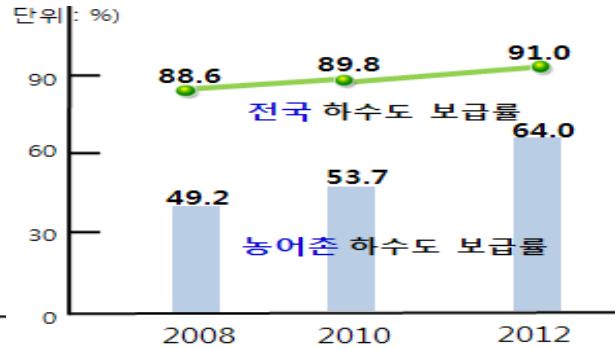
# 지표로 본 환경정책 성과 및 현 좌표

<계 속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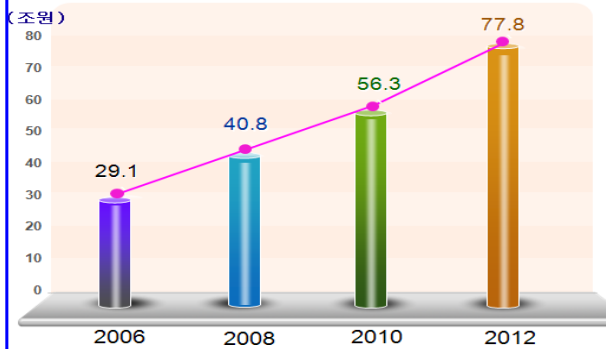
<상수도 보급률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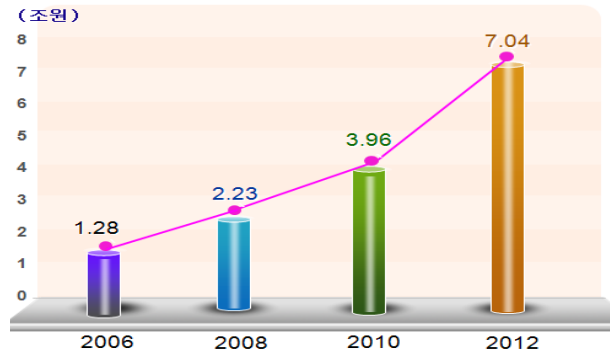
<하수도 보급률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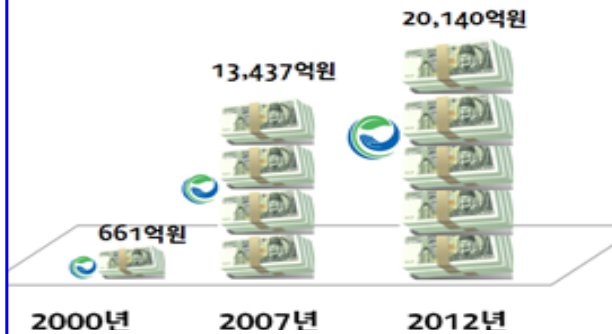
<환경산업 매출액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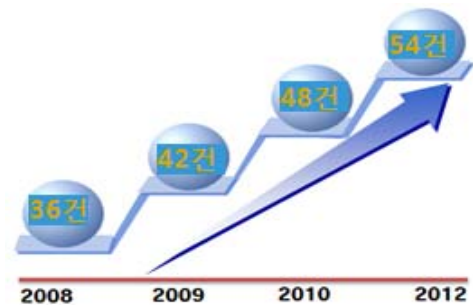
<환경산업 수출액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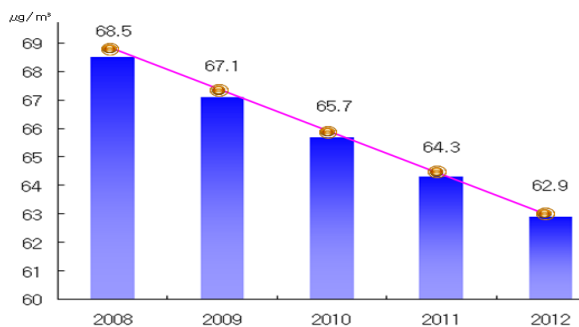
<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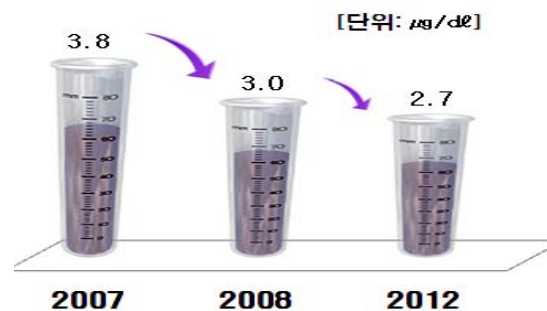
<환경협력 MOU 건수>



<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농도>



<국민 혈중 수은농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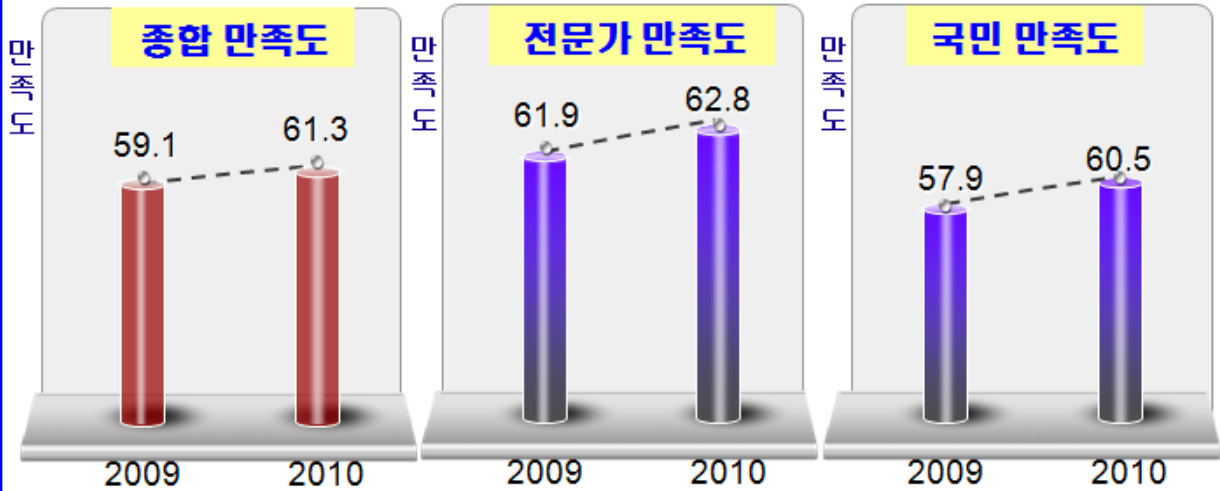


[참 고]

환경정책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

1.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 만족도 조사결과 (2010.12)

- 8개 분야 환경정책에 대한 인지도, 대응성, 정책 효과성,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



2. 정책 우선순위 평가결과 (2010.12)

| 우선순위 | 환경정책 분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| 전문가 계층           | 일반 국민            |
| 1    | 녹색성장 견인          | 건강하고 맑은 물 환경 조성  |
| 2    | 저탄소사회로 이행        |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공급 |
| 3    | 건강하고 맑은 물 환경 조성  | 저탄소사회로 이행        |
| 4    | 자연생태계 보전 및 가치창출  | 자연생태계 보전 및 가치창출  |
| 5    | 자원순환사회 정착        | 환경보건 서비스         |
| 6    |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공급 | 녹색성장 견인          |
| 7    | 환경보건 서비스         | 자원순환사회 정착        |
| 8    | 국제 환경리더십         | 국제 환경리더십         |





---

## Ⅱ. 2011년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

---



# 1. 정책여건 분석

## □ 환경정책 여건 (SWOT)

| 강 점   | 약 점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저탄소 녹색성장,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</li> <li>▶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부문별 실천프로그램 마련·이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내 녹색시장 협소 및 환경산업의 기술·자본력 부족</li> <li>▶ 증가되는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 어려움</li> <li>▶ 환경단체 등과의 소통채널 협소 및 대립의식 잠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 회   | 위 험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토 및 자연자원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</li> <li>-보호된 자연자원을 핵심자원으로 한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 확산</li> <li>▶ 탄소세, 목표관리·배출권거래제,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환경가치 중심의 새로운 정책 도입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남·북 긴장, 세계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경제위기 발생 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후퇴 우려</li> <li>▶ 녹색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의 정책 피로도 증가 우려</li> <li>▶ '12년 선거 국면 진입에 따른 정책의 정치화 가능성 증대</li> </ul>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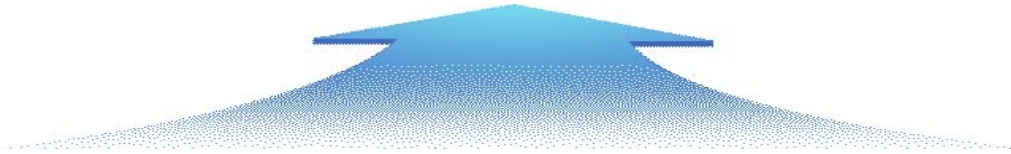
## □ 환경정책 추진방향

-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입·시행 및 기존 정책·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력 지속
- 서민, 취약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환경서비스 확대,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, 환경법질서 확립 등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
- 환경정책 수립·집행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, 부처 협의 강화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통합적 정책 수립·이행

## 2. 정책방향 및 과제

### 가. 비전

녹색강국 대한민국



### 나. 주요 정책과제

#### 기후변화 대응

- ①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
- ② Me First 운동 확산
- ③ 4대강 살리기와 물 관리 선진화
- ④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

#### 녹색성장 견인

- ① 물산업 육성
- ② 생물자원 확보·이용
- ③ 자원순환성 제고
- ④ Top 환경기술 개발

#### 사람·환경·시장의 조화

- ① 국민 생활공감 정책 강화
- ② 환경규제 선진화
- ③ 환경법질서 확립
- ④ 환경거버넌스 구축

---

### Ⅲ. 주요 정책과제 실천계획

---



# 1. 기후 변화 대응

## 가.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

◆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·감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, 부문별 감축대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 실현

### 1)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

#### ① 부문별·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

- 산업 경쟁력, 절차적 투명성 등을 고려하고 과학적인 감축 잠재량 분석모형을 활용한 감축목표 분석·설정('11.6)
-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감축정책 및 조치의 이행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('11. 하반기)

#### ② 국가 온실가스정보·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

- 국가 정보 및 통계의 산정·검증절차 확립('11. 상반기) 및 「국가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」 고도화를 통한 정보관리체계 선진화
- 온실가스 감축모형, 인벤토리 구축, MRV(측정·보고·검증)에 대한 개도국 역량 지원

#### ③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

- 탄소시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('11, 300명),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·관리('11, 10개) 및 검증 심사원 양성('11, 150명)
- 온실가스·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기술 개발,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수립('11.6, 타당성조사)

## 2) 부문별 감축 프로그램 추진

### ① 사업장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

- 조기감축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관리업체 배출량의 1%이상 감축을 유도하고, 부문별 관장기관에 대한 종합 점검·평가체계 마련
  - \* 관리업체별 목표설정, 감축계획 작성 및 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·평가
- 모든 공공기관 대상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, 감축목표 및 이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, 감축활동 지원방안 등도 병행 추진('11, 약 773개 기관)

### ② 그린 카 보급을 통한 자동차 온실가스·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

- (기준) '12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및 연비기준 시행을 위해 기준 위반 시 벌과금 부과 등 법령을 정비('11.10 국회제출) 하고, 제도 시행 전 자동차의 온실가스·연비 사전 인증
- (전기차) '11년 800대 시범보급 등 '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총 6.7백만 톤 감축
  - 선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보급모델 개발 및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, 국립공원에 전기차를 활용한 생태 우수지역 청정 운행모델 개발('11~'20)
- (저탄소카) 경차 기준을 보완하여 배기량은 현실적으로 확대하되, CO<sub>2</sub>를 저 배출(100g/km 미만)하는 명품 저탄소카 보급 대책 마련
  - CO<sub>2</sub>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-디스인센티브(Bonus-Malus), 기존 경차 혜택, 세제 특례, 우선 주행권 등 혜택 검토



- (대중교통) 도심 운행 시내버스를 CNG하이브리드차로 시범적 교체·보급하고 환경성능을 검증 후 단계적으로 보급 확대('11, 30대)
- (공회전제한장치) 시범사업 추진('10) 성과를 분석 후 자동차에 장치부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모니터링('11, 700대)

### ③ 가정·상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지원

- 탄소 포인트, 녹색제품(탄소성적표시인증제품 등) 구입 포인트, 대중교통 이용실적 등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사업 추진
-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하여 차주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녹색자동차보험 설계
  - 전문가 포럼 구성('11.2), 보험 상세설계 및 시범사업 실시('11.10)
-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저탄소제품 인증제도 도입
-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건물 확대('11, 500개 이상)

### ④ 사업장 온실가스·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사업 추진

- (환경기초시설) 유희부지에 풍력·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·이용하는 등 탄소중립화 프로그램 본격 추진('11, 8개소)
  - 상수도설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·보급('11.12)
- (중소사업장) 청정연료 전환, 저NO<sub>x</sub>버너 교체 지원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 및 CO<sub>2</sub> 동시 저감
  - B-C유를 LNG로 전환('11, 수도권지역 국가산업단지 대상), 저NO<sub>x</sub> 버너 800대 지원('11)

### 3) 저탄소 경제를 위한 탄소시장 육성

#### ①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

- (배출권거래제) 목표관리제 제도설계 총괄 역할,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정교한 제도 설계
  - 참여범위 결정, 기존 목표관리제와 연계, 할당위원회 구성, 기금 신설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 등
- (상쇄제도)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다른 곳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참여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상쇄제도 도입
  - 외부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운영 세부지침 마련('11.12)
- (CDM) 단위사업으로는 민간 참여가 어렵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 사업화 추진 지원('11, 2건)

#### ② 차별화된 탄소시장 도입

- 국제적으로 연계 가능한 의무적 시장과 국내시장으로 육성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·설계하여 탄소시장의 참여자 확대
- (의무적 시장) 배출권거래제법에 근거한 구속적 감축목표 할당과 엄격한 검·인증(MRV)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적 탄소시장 운영 방안 마련('11.12)
  - \* OECD 국가 간 상호 연계를 고려하되, 상쇄제도를 통해 배출권거래의 유연성을 확보
- (자발적 시장) 탄소포인트제, 공공기관의 감축실적, CDM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업 등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 구축('11.12)
  - \* 자발적 시장을 통해 검증과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의무적 시장의 배출권으로 편입

## 나.

## Me First 운동 확산

- ◆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, 친환경 운전, 친환경음식문화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운동 전개

### 1)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·홍보 확대

#### ① 그린스타트 1,000만 네트워크 구축

- 녹색생활을 선도·홍보하는 그린스타트 참여단체(4,200여개)의 연락·관리체계(DB)를 구축하여 전국 1천만 인적 네트워크 강화
  - \* 1단계 광역네트워크 구축('11) 후 2단계 지역네트워크 구축('12) 추진

#### ② 녹색일꾼 교육·양성 및 커뮤니티 구축

- 대학·군·지자체, 환경전문인력 양성과정, 자연환경연수원, 명예환경감시단, 환경교육홍보단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사회교육 강화
-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 참여·수료자, 운영자 간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녹색일꾼을 양성하고 분야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
  - 대학별 그린리더십 과정 개설·확대('11 1개 대학 5,000명 → '13 20개 대학 50,000명)
    - \* 서울대, 그린리더십 14개 교양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반영('10)
  - 초·중·고 정규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·학부모의 관심·참여 확대('11, 환경교육프로그램 120~150개 인증)
    - \*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이수 실적을 학교 생활기록부, 입학사정관제 심사 등에 인정·반영 추진

- **군 장병 연 25만 명**을 대상으로 **녹색 교육과정 확대 및 맞춤형 교재 개발**('11 간부교육과정 → '13 전군 교육과정)
- 온실가스·생태독성·환경컨설팅 등 **환경전문인력 양성과정** 수료자 등의 **네트워크**를 구축하고 동기모임 등 **커뮤니티 활동** 촉진
  - \* 환경 분야 **전문 인력 양성사업** 교육생·강사진 등 약 2천명의 연락망 구축
- 유역·지방환경청의 **명예환경감시단**(16,000명)·**환경교육홍보단**(400명), 자연환경연수원(8개 기관 7,000명 교육) 및 **푸름이 이동차량** 교육생의 **자조조직\*** 구성 등 **지속적 교류채널** 구축·지원
  - \* 8개 자연환경연수원 수료생(7천명)이 참여하여 「**전국자연사랑연합**」을 결성하고 전국대회 및 지역 녹색실천운동 전개('10)

### ③ **부문별·지역별 그린리더 2만명** 양성 및 **그린리더 협의체** 구성

- **직장·학교 등 부문별, 지역별 그린리더 양성과정**을 운영하여 일상에서 **녹색생활 실천**을 확산시키고, **교육센터와 연계한 지역별 그린리더 협의체**를 구성하여 실천운동의 거점 마련
  - \* 16개 시·도 및 MOU체결 기업·단체와 협력하여 7,100명 이상 참여('10)

### ④ **온·오프 기후변화 종합교육센터** 설치 및 **녹색생활 콘텐츠** 개발

- **지역별 종합교육센터**를 개설하여 지역의 **교육·홍보활동**을 지원하고, **교재·커리큘럼·강사·시설의 정보**를 **DB화·보급**하며, **센터·교육생간 온라인 쌍방향 소통** 및 **커뮤니티 활동** 지원
  - \* 과천 기후변화 환경교육센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모델, 교육 콘텐츠 등 개발('10)
- **그린시티, 그린캠퍼스, 환경교육 시범학교, 그린리더** 등 **분야별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**를 도출하여 **홍보·공유**

## 2) 부문별 실천프로그램 확대

### 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친환경음식문화 전국 확산

-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 수립·시행('11.6)
  -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을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로 대 전환
  - 시·군·구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'10년 대책추진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
-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계적 확대
  -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자체의 35%까지 종량제 확대 시행('11.12)
  -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민·관 포럼 구성·운영('11.4~11)
    - \* 포럼은 산·학·연·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
  - 지자체 관계공무원 워크숍(2회) 및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,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와 연계하여 종량제 조기 정착 독려('11.12)
  - 지자체,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종량제 필요성 계도 및 설득
  - **RFID** 기반 수거시스템 설치 지원(5개 지자체, '11.3~12)
- 지자체장이 관내 모든 배출원(가정, 음식점, 다량배출사업장 등)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 수립·관리 제도화('11.6)

### ②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

- 친환경 운전 포털사이트([eco-drive.or.kr](http://eco-drive.or.kr)) 구축 및 거점 교육센터 (20개 대학) 운영을 통해 대국민 정보제공, 실습교육 등 추진
- 친환경 운전 안내 시스템(EMS) 보급('11, 200대)하고,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, 승용차 없는 날 등 대국민 캠페인 전개
  - \* EMS :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급가속, 공회전 시간 등을 모니터링·정보제공

### ③ 녹색소비·생산의 선순환 유도

- 생활용품 등 시장성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**녹색제품 인증품목 확대 및 구매 촉진**
  - \* 내구성 목재, 토목섬유 등 국책사업 관련 제품, 에너지효율 우수제품 등 시장성이 우수하고 환경성이 큰 제품으로 인증품목 확대
  - 품질, 소비자 반응을 평가하여 **우수제품을 선정하고, 민간시장 마케팅 집중 지원**(중소기업제품의 대형 유통매장 **Private Brand** 개발 등)
- 소비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**녹색제품 유통망 구축**
  - **그린스토어 지정·확대\***, **온라인 쇼핑몰 녹색제품 취급 확대** 등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합한 마케팅 추진
  - \* '10년 11개(시범지정) → '12년 100개 → '15년 300개
- **그린스토어 이용 및 녹색제품 구매 시 현금성 마일리지**(그린포인트) 등 **인센티브 제공**
  - 정부·지자체, 제조사, 온-오프 유통업체, 카드사 등과 MOU 체결('11.8)
  - 환경부·지자체가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(에너지·수도사용량 절약),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성 포인트와 연계·통합 추진
- 소비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**교육·홍보 추진**
  - 권역별 **녹색구매 지원센터**를 설치하여 **녹색제품 판촉, 녹색소비 교육, 체계적인 홍보 추진**('11 1~2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)
- **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기반 강화 및 중소 녹색제품 제조업체 지원**
  - **조달시장 녹색제품 등록 확대**('10 49% → '11 53%), **녹색구매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, 중소기업 인증비용 경감 등 지원방안 강구**('11.12)

## 다. 4대강 살리기와 물 관리 선진화

- ◆ 기후변화 심화 및 4대강 살리기 이후 변화된 하천환경에 적합한 수질·유역관리체계 구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 극대화
- ◆ 물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및 새로운 친수문화를 정착시키고, 지류·지천 환경개선대책 추진 본격화

### 1) 4대강 보(滌) 중심의 예방적 수질관리

#### ① 16개 보(滌) 중심의 수질목표 관리

- '12년까지 4대강 '좋은 물(2급수)' 비율 86%(57/66) 달성을 위하여 '11년까지 수질·수생태 개선 사업(1,281개)의 79.4%를 완공
  - 특히, 녹조 방지를 위한 하·폐수처리장 인처리시설(237개)의 85%를 '11년까지 완공하고, 처리장 방류수질기준을 강화('12)
  - \* 신설처리장 인처리시설(36개)은 처리장 설치와 함께 '12년까지 완료
- '4대강 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('06~'15)' 중간평가를 통해 16개 보 중심으로 유역권 조정 및 목표수질 설정('11.12)

#### ② 총량제 확대개편 등 유역관리 강화

- 녹조발생 원인물질인 인(T-P)에 대해 오염총량제를 시행('11.1, 한강 '13.1)하고 인 다량배출사업장(102개소)에 대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TMS 활용 실시간 배출부하량 관리('11.7)
- 보 중심의 총량관리 목표수질 강화('13)를 위해 총량관리 수질 모델링 개발('11.6.) 및 수질변화 모니터링('11.6~'13)
- 오염물질 상시감시를 위해 수질 TMS 부착 대상시설(3종 사업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) 및 측정항목 확대('12, 수은, 크롬, 아연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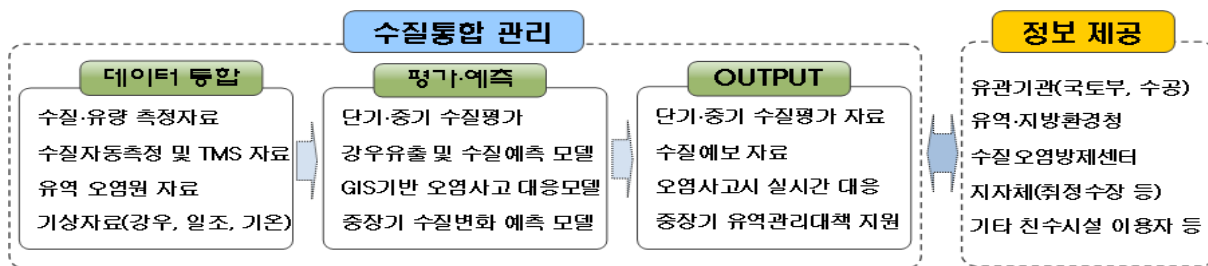
### ③ 4대강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질예보시스템 가동

- 보 담수구간 내 국가 대표 수질측정 지점(16개소) 신설 및 이동형 수질자동측정기 설치(16개), 보 상류 수질자동측정소 이전(13개소)·확충(3개소) 등을 통해 16개 보의 수질을 실시간 측정

\* 국가 수질 자동측정소 확충 : '10 57개소 → '11 60개소 → '17 84개소

- IT기술과 수질모델링기법을 활용하여 수질 예보제\*를 도입(16개 지점, '11.8~'11.12 시범운영)하여 관계 기관과 일반 시민에게 수질 예측 결과를 통보

\* 오염원, 수질, 수량, 기상자료를 통합한 3차원 수질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조류농도(Chl-a), 수온 등을 2일~1주일 범위 예보



### ④ 과학적 수질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
- 수질관리에 최적인 보 운영방안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(가칭) 가동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수질악화 예측 시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역할 수행

\* 환경공단 TMS 관제센터 : 오염원을 TMS로 실시간 분석

지자체·환경부 : 불법 배출 단속, 처리수준 강화 등 오염원 저감

수공·국토부 등 : 수질통합관리센터의 최적 수문개폐 시점과 유속·기간 예측에 따라 수문조작·방류 등



## 2)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

### ① 4대강의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강화

- 16개 보 설치 전·후 생물다양성, 부영양화 등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수생태계 회복상태를 정밀 평가
  - \* 생태계 회복과정을 공개하여 사회적 우려 불식 및 4대강 사업 효과 제시
- 4대강 유역의 수생태 건강성 모니터링 강화(800개소→880개소),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생태지도 제작 및 생물측정망 기반 조성

### ② 하천 생물종 복원 및 생태연결성 강화

- 하천별 깃대종 증식, 4대강 인근(본류+2km) 서식 멸종위기 어류(12종) 증식·복원(~'12)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
  - \* '10년까지 기초조사 실시, 11년부터 치어증식, 방류 등 본격 추진
- 본류와 지류의 생태 연결성 강화를 위해 16개 보 설치구간 어도와 연계된 지류 어도 설치(8개소, ~'15)

### ③ 전국 셋강·실개천의 수생태 건강성 증진

- 하천의 훼손된 생태계, 수질을 복원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확대('11, 131개)
- 농촌의 오염우심도량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강화(150개소)
- 건천화·복개된 도심하천을 복원하는 사업(청계천+20)을 지속적 확대·추진('09~'10 20개소 착수 → '11~'13 10개소 착수)

### ④ 수생태 복원 성공사례 확산 전파

- 하천복원 사업을 통한 수생태 복원의 성공사례 홍보하여 4대강 살리기로 인한 생태계 건강성 훼손 우려 해소
- 생태하천 복원사업,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, 청계천+20 등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수생태 복원 성공사례 콘테스트 개최('11.9)

### 3) '물과 사람'이 상생하는 선진 친수문화 정착

#### 1] 좋은 물 국가 브랜드화

- 좋은 물 브랜드에 대한 CI를 제작하고 물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'함께 하는 4대강' 캠페인 추진 ('11.1~)
- \* 「좋은 물」 : 물고기가 뛰어 놀고, 수영할 수 있는 물(BOD 3mg/L이하)

#### 2] 친환경적 친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

- 생태하천복원,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확대되는 친수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체험 프로그램\* 개발('11.5)
- \* 보 주변 하천, 생태자원 등을 중심으로 한 올레길·둘레길 코스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- 프로그램 별 친환경적 물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작·배포하고 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 해설사 양성('11.10, 교육·시범배치)
- 강 체험 프로그램, 체험담 소개, 수기 공모전, 물 환경 정책 특별 기획전 등을 통한 즐거운 '강 나눔 문화' 국민운동 추진

#### 3]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4대강 만들기

- 4대강 본류 핵심거점별(13개) 수질관리 자치협의회\* 구성·운영, 지역중심의 수질보전활동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('11.4~)
- \* 주민(환경지킴이 등), 민간단체, 지역산업체, 전문가, 지방 환경관서 등 참여
- '쓰레기 되가져오기' 등 생활 속 실천방안 등을 마련·홍보
- 기업 참여형 1社 1하천 운동('11, 500개 기업), 학생 참여형 1校 1하천 운동 확산('11, 16개교)을 통해 물 관련 네트워크 구축

## 4) 국가 물 환경 관리 비전 완성을 위한 지류·지천 살리기

### ① 전국 하천의 물 환경 관리 비전 제시

- 4대강 살리기 비전을 전국의 하천으로 확대·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물 환경 관리 비전 구상
  - 정책고객, 관계 전문가, 일반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물 환경 관리 비전 정립 및 비전 선포식 개최('11.6)
-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물 환경 관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('11.12)

### ② 지류·지천 살리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·이행

- (사업범위) '20년까지 수질이 불량한 전국 47개 지류를 대상으로 문제점 해결중심의 맞춤형 수질개선대책 단계적 추진
  - (1단계, ~'12) 5대 오염우심 유역 8개 하천
    - \* 경안천, 갑천·유등천, 미호천, 광주천, 영산강상류, 풍영정천, 금호강
  - (2단계, ~'20) 4대강 및 기타 수계 39개 하천(BOD 3~5ppm 미달)
    - \* 그 외 지류는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민간 커뮤니티 중심의 “어울림하천 만들기”(2,000개소)를 통하여 추진
- (수질개선) 수질오염의 67%( '15 예측)를 차지하는 비점오염 저감 중점
  - (도 시) 초기우수(5mm) 처리시설 1,004개소 설치
  - (산업단지) 초기우수·유출사고 대비 완충저류조 15개소 설치
  - (농촌지역) 토사유출 완충시설(소양·도암·임하호), 생태유수지(32개소), 축산습지(100개소), 생태둑병(1,000개소) 등 자연형 정화시설 설치

- (수생태) 훼손되고 복개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복원
  - (하 천) 생태적으로 훼손된 하천(14,722km) 중 11% 복원
  - (도 심) 청계천을 모델로 복개하천 생태복원 확대(청계천+20 → 청계천+50)
- (수량 확보) '20년까지 빗물 저장·이용시설 확충, 물수요 관리 강화를 통해 수자원 30억 톤(유용 수자원의 약 10%) 확보
  - 빗물 저장시설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 연간 1억 톤 확보
    - \* 도시지역 지하 빗물저장터널, 농촌지역 소규모 저류시설(연못, 둠벙), 공공시설 빗물저장시설 의무화 확대(학교, 공공주택 등)
  - 하·폐수 재이용, 중수도 확충, 물 절약 등 수자원의 순환 활용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연간 29억 톤 확보

### ③ 핵심지류 우선 투자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

- 4대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큰 광주천, 갑천, 미호천, 금호강 등 4개 핵심지류에 대해 '11년부터 우선적 투자
  - \* 하수처리장 76개소, 하수관거 11개소,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소, 초기우수(CSOs) 처리시설 4개소 등 총 95개 사업('11~'12)
-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('11.3) 등을 통해 지역요구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 수립('11.5)

### ④ 정부합동 비점오염원관리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범부처 대응시스템 구축

- 인공습지·저류조 등의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(~'20) 마련
-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('11.3), 도시계획·농업·임업 등 전 분야 저영향개발(LID) 기법 확산, 초기우수 처리강화 등 각종 규정 정비방안 협의·수립('11.9)

## 라.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

- ◆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각종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국가적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·이행

### 1)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

- ① (모니터링) 입체적 감시망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 및 인근 지역의 기후변화 유발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
  - 동아시아의 기후변화·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하는 지구환경 위성 개발 추진('11~'18, 환경부·교과부·국토부·기상청 공동)
  - 5개 권역(제주권 등) 지상 집중 관측소 설치 및 운영('11.12)
  - 남극세종과학기지 기후변화감시소 본격 운영, 온실가스 세계 표준센터 유치 등으로 기후변화감시 분야 국가 위상 제고
- ② (예측) IPCC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한반도 온난화 기여 정도 분석, 정교한 전망자료 생산
  - 기후변화에 따른 응용기상정보 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 및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('11.12)
  - 건강, 재해·재난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지도 작성('11)

### 2)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

- ① (국가 실행전략) 「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('11~'15)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전략 수립

- 분야별 적응대책의 비용·편익분석, 기후변화 속도, 적응효과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의 우선순위 설정
-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적응 세부이행계획 수립 지원
  - 세부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, 건강, 재해 등 10개 분야별 전문 컨설팅단 구성·운영(환경부, 기후변화적응센터)
  - 건강, 생태계 등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연구단 구성·운영(국립환경과학원, 7개 분야)

② (제도 개선) 기존 정부정책·사업 등에 적응대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령·지침 등 정비

-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적응 분야별 평가 방법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
- 분야별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적응요소 발굴, 체크리스트 마련, 반영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추진

③ (국제협력) UNEP·IPCC 등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공동대처

- UNEP와 공동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, 기후변화 공동 감시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
-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반(WG) 주집필자 및 시나리오 전문가 회의 개최('11.7)

④ (국가보고서) 온실가스 관리·통계, 기후변화 적응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총괄한 제3차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UN에 제출('11.12)

- (건강) 폭염, 전염병, 대기오염, 알레르기로부터 **국민생명 보호**
  - 폭염피해 방지대책 마련(무더위쉼터, 휴식시간제 등), 전염병(말라리아 등)·대기오염 감시 및 예·경보체계 강화 등
- (재난·재해) 적응을 고려한 **방재기반 강화**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
  - 취약지역 분석 및 방재기준 강화, 재해위험시설(소하천) 보수, 도시하수도시설 개선 등
- (농업) 기후적응 **농업생산체제로 전환**하여 피해저감 및 기회 창출
  - 작물 고온 적응성 재배기술 및 신품종(망고 등) 개발 보급,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 등
- (산림) 산림 건강성·생산성 증진 및 산림피해 저감
  - 지역·수종별 취약성 평가 및 임업 생산성 유지·증진, 산불·산사태 및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 방지대책 등
- (해양·수산업) 해수면 상승 대응 및 안정적 수산식량자원 확보
  -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변화 관리체계 및 적응방안 마련, 어장변화 감시·예측 및 미래수산자원 확보 추진 등
- (물 관리) 홍수·가뭄 등 기후변화로부터 **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**
  -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홍수대응능력 향상 등 안정적 물 공급, 하천·호소 수질관리 강화 및 하천 생태계 보전·복원 등
- (생태계) 국가장기생태연구('04~)를 통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 관계 규명, 생태계 보호·복원을 통한 **한반도 생물다양성 확보**
  -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 선정·모니터링, 한반도 생태축 보전·복원대책을 통한 한반도 생태계의 적응능력 강화
  - 생물종 및 유전자원 보전·복원,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방지 및 관리, 녹지 공간 조성으로 도시지역 기후변화 적응

## 2. 녹색성장 견인

### 가. 물산업 육성

- ◆ 소규모 상·하수도사업의 통합으로 물 전문기업 육성, 물 재이용·먹는 샘물 시장 육성,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

#### 1) 상·하수도 통합을 통한 물 전문기업 육성 기반 마련

- ① 지방 상수도사업의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영개선
  - 현재 164개 시·군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원수, 급수인구,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'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단계적 통합 추진
    - 우선, 5~10개 지자체를 묶어 권역을 설정하고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('11 누적, 통합모델 5개 창출)
    - \* 경남 남부권(통영, 사천, 거제, 고성) 통합('09.12) 및 6개 권역 대상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 중('10.12)
  - 우선 적정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공기업(환경공단, 수자원공사 등)에 수도사업을 위탁
    - 민간 기업의 수도사업 위탁은 공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교두보 확보 후 점진적 추진
    - 이를 토대로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 및 토털솔루션 능력을 보유한 수도사업 전문기업 육성, 물산업 해외 진출기반 마련
  - 통합에 소극적인 지자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상수도분야 국고 보조율 및 지원사업 확대, 지방조직 정원관리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·추진



## ② 하수도 사업의 통합 운영·위탁관리 추진

- 처리장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을 수계 유역과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43개 권역으로 운영 통합
  - 시·군 하수도사업을 25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운영방식은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적 도입 추진('12~'15)
  - 댐 상류(10개 권역) 지역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통합 및 일괄위탁 추진('11)
    - \* 장기적으로 통합권역(댐 상류 10개, 시·군 25개) 및 특·광역시 8개를 대상으로 2단계 통합·대형화 추진
- 통합된 대규모 하수도사업을 전문 민간기관이 수탁운영토록 함으로써 경영 효율화 및 경쟁력 있는 물 전문기업 육성 도모
  -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 수탁관리업 등록제(기술인력, 시설·장비 요건 등 충족)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('11.12, 하수도법 개정)

## ③ 통합 촉진을 위한 대책 병행추진

- 상수관 용도별 기능성 평가체계 확립,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관망 개선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시스템 구축
- 정수장, 하수처리장 등 시설위주 점검에서 지자체 상·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전환하여 효율적 진단체계 구축
  -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과
  - 평가결과의 대국민 공개로 지자체장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노력 유도

## 2) 연관 물산업(물 재이용, 먹는 샘물, 기자재 등) 육성

### ① 먹는 샘물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

- 바나듐워터, 고미네랄 지하수 등 인체에 유익한 다양한 샘물 자원을 발굴하여 프리미엄 시장 창출·확대('11~)
- 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공급을 제도화하여 일반시민의 물 선택권 확대 및 시장 창출('11~)
  - 병입 수돗물 유상 공급에 대한 우려·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주체, 인가조건, 품질관리, 수익금 활용처 등을 법제화 추진 ('11 하반기)
- \* '10년 기준 22개 수도사업자가 병입 수돗물을 무상 공급 중
- 미네랄이 풍부한 기능성 지하수인 제주도 염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여 먹는 샘물 시장 확대
- 해외 수출용 먹는 샘물에 공통적으로 부착 가능한 대한민국 단일 브랜드를 개발하고 집중 홍보하여 국제 신인도 제고('11~)

### ②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 육성

-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물 재이용 기본 계획 수립('11.9)
  - \* 물 재이용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, 재이용시설 설치·관리 통합지침 등 세부 지침 제정
- 하·폐수 처리수 재이용업 및 재이용시설 설계·시공업 등 전문자격업종을 신설하여 물 재이용 전문 기업 육성('11.6)
  - \* 하수처리수 신뢰성 제고 및 수요창출을 위해 재이용 수질기준 마련 병행

-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본격 시행
  - 농업용수, 하천유지 용수 등 공익 목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재정사업 확대('11~'20, 95백억원 투자계획)
  - 하·폐수 처리수의 재이용(공업용수) 민간투자를 도입·확대하여 투자재원 확보 및 기술 향상 촉진('11~'20, 1.8조원)
  - \* 재이용수 우선 공급·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
- 물 재이용 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(공공성격의 물 다이용 시설)

< 의무화 대상시설 확대 내용 >

| 구 분    | 현 행           | 추 가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빗물이용시설 | 종합운동장, 실내체육관  | 국가·자치단체 청사<br>학교, 공동주택 등 |
| 중수도    | 호텔, 백화점, 공장 등 | 택지 및 산업단지 등<br>공공 개발사업   |

③ 상하수도 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

- 상하수도 기자재 품질기준(내구성, 수밀성 등) 개선 및 위생안전 기준 인증('11.5 시행) 등을 통해 국내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
- 국내 위생안전기준 인증만으로 해외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외국 인증제도와 상호 인정협약 체결 추진
  - \* 미국 NSF인증, 일본 JWWA 인증 등

### 3)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

#### ① 시장 주도형 원천기술 및 공정·운영기술 개발

- (고성능 막여과) 막 여과 기반의 하폐수 고도처리기술을 상용화하고, 첨단 소재 막 모듈 및 공정설계기술 개발 투자 확대
  - \* 국내 최초로 중대형 정수장용 여과막 및 공정설계 기술을 개발 후 영등포 정수장에 시범 적용하여 100% 국산막 시대 개막('10)
- (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) IT기술을 상수도에 접목하여 지능형 물 생산·공급 시스템 개발 추진
  - 로봇 등 관망 감시센서, 유량·수질 실시간 측정기기, 유량 자동 제어 기기, 원수 수질에 따라 정수처리 수준을 달리하는 지능형 정수처리플랜트 기술 등 개발 지원
    - \* 일본의 경우 정화처리기술, 플랜트건설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강점이 많지만 설비조합, 관리·운영능력 등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낮아 구미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자국의 물산업 시장 잠식('09.7, SERI)
-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단, 고도 수처리사업단 등 2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R&D 투자('11~'20, E-I 기술개발사업)

#### ② 물산업 통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- 물산업 통계 작성 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기업투자의 기초자료로 제공·활용('11~)
  - \*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OECD 환경산업분류체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계·분류체계 마련
- 물산업 관련 국내외 정보를 집대성하여 수요자 관점의 웹기반 종합정보시스템(DB) 구축·운영('11.3, 시스템 구성계획 수립)
  - \* R&D 결과, 각종 통계, 국내외 정책·제도, 전문 인력 및 업체, 국제 시장 동향, 최신 물산업 기술 등의 정보 제공

### ③ 물산업 전문 인력 양성

- 국내외 프로젝트 수주·개발 등 국내 물산업 발전과 해외진출을 주도할 물산업 PM(Project Manager) 양성 교육과정 운영
- 환경 분야 미취업 대학(원)생을 대상으로 '13년까지 연간 100여명의 PM 교육·양성

### ④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

- 세계 물 시장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 수립('11.6)
- 그간의 상·하수도 인프라 구축, 청계천 복원, 4대강 정비사업 등 국내 성공경험을 활용하여 아세안, 중동, 아프리카 등 신흥 물 시장 개척
- \* 동남·중앙아시아 등 물 시장 급성장지역(연 7% 이상)은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과 연계하여 진출('11년 아제르바이잔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 800억 원 등)
- 민·관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국내 민간기업의 사업수주 경쟁력 강화
- 운영관리 실적 보유 공기업(한국환경공단 등)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고, 운영·관리는 민간 기업이 주도
- 상하수도 기술의 국제표준화 대응 및 유리한 입찰조건 확보 추진
- 세계은행(WB), 아시아개발은행(ADB) 등 국제기구의 입찰 조건에 국내 핵심기술을 표준기술로 반영 추진
- 개도국 물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지원, 시범사업 등 정부 간 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 입찰제도 및 설계 표준 등을 한국화

## 나. 생물자원 확보·이용

- ◆ 세계 생물자원 가치는 700조원('07, CBD협약사무국)에 달하지만 매년 생물종·서식지 감소(30년간 생물종·서식지의 40% 감소, UNESCO)
- ◆ 생물유전자원 접근·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('10.10, ABS)으로 생물자원 확보·관리 및 상업적 이용을 위한 국가 간 경쟁 가속
- ◆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선진화 및 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기반 구축을 통한 BT산업 육성

### 1) 생물다양성 관리체계 선진화 및 생물자원산업 육성 기반 구축

####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

-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, 분산된 생물다양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령 제정('11.6,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)
- 생물다양성 업무를 조정·통합하기 위한 「국가생물다양성 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」 구성·운영('11.12)

#### ② 생물자원 연구기반 강화

- 한반도의 고유·자생 생물종 발굴 및 국외반출 생물자원 등에 대한 관리 강화
  - 2020년까지 한반도 고유생물종\* 중 5만종 이상의 고유·자생종을 조사·발굴 추진
- \* 10만종 내·외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3만 3천종을 조사·발굴
-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 시스템, DNA 바코드 시스템 마련 등 국가 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('11~'13)

### ③ 생물다양성 통합정보체계 구축·운영

- 부처의 생물다양성 정책·업무를 통합·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「국가생물다양성 센터」 설립·운영('11.12)
-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, 생물유전자원 정보 통합관리, 유전자원의 분양·이용 촉진, 유전자원의 조사·목록 마련 등

### ④ 생물자원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기반 확충

- 생물자원 분류 등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턴십 운영, 분류자격기사제도 확대 시행('11.8~)

### ⑤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·육성 기본계획 수립·이행

- 2020년까지 생물자원산업·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생물자원 발굴·관리, 활용 인프라 구축, 실용화기술 개발,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시스템 정비 등 14개 우선 추진과제 선정
- \*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부처 협의,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·시행('11.2)

### ⑥ 범정부 차원의 BT산업 육성방안 수립

-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실용화 기술개발, 관련 산업의 육성·지원업무\*를 통합·조정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
- \* 생물자원(환경부), 생명연구자원(교과부), 농업유전자원(농식품부), 해양 생물자원(국토해양부), 바이오산업(지경부), 전통지식DB 구축(특허청) 등
- 관계부처 협의, 생물다양성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부처합동 BT 산업 산업지원 및 지원대책(안) 마련('11.12)

## 2) 나고야 의정서 국가 대응체계 구축

### < 나고야 의정서 개요 >

- ◆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'10.10, 나고야)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(ABS)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
  - ▶ 유전자원 접근 시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함
  - ▶ ABS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
    - \* 각국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2011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

### ①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후속대책 수립·시행('11.6~)

- **ABS 전담 대응반 설치('10.11~'11.6), 법·제도 정비방안 마련,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BS 상담센터 (Help Desk) 설치·운영 등**
  - \* '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결과 및 후속 대책' 국무회의 기보고('10.11.2), 향후 부처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후속대책 수립('11.6)
- **ABS 대응대책 및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등을 총괄·조정하는 생물다양성 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 및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('11.12)**

### ②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·제도 정비 추진('11.1~)

- **현행 법체계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한 경우 (가칭)「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**
  - \* 정부입법 중인 「생물다양성 보전·이용법」에 ABS 의정서 원칙 우선 반영
- **관계부처 합동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보완('11.12)**
  - \*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('09.6)하여 추진 중인 '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'에 ABS 의정서 관련 대책 보완



### ③ 후속 협상능력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

- 생물유전자원 파생물(유전자 미포함 화합물 등) 및 국가소유 전통 지식의 이익 공유, ABS의정서 소급적용 등에 관한 정부 간 후속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및 대응논리 개발
- 생물자원 및 ABS의정서에 관한 국내 이해관계자,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미나·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
-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 ABS 의정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ABS 상담센터(Help Desk) 설치·운영('11.1~)

### ④ 생물다양성 목록 특별보고서 발간

-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책 추진의 이해 증진 및 효율성 제고
- 외국에 국가생물다양성 정책 소개 및 국내기업 등 일반국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
  - 한국생물다양성 특별보고서(Special Report : Biodiversity Outlook in Korea) 국·영문 발간

### ⑤ 생물유전자원 관리기반 강화

- 고유 생물자원의 체계적 조사·발굴('11 700종), 한반도 생물지도 및 생물도감 발간, 국가 생물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속 추진
- 국외반출 생물자원 관리 개선대책, 국가 생물자원 인벤토리의 국가 표준화사업 추진 등 생물주권 확보기반 마련('11~)
- 생물자원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기반 마련, 미확보 생물 자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양성기반 확충('11.12)

## 다. 자원순환성 제고

- ◆ 전자제품·자동차 강국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폐전자제품·자동차 자원순환성 확보 및 재활용 확대
- ◆ 국가 폐자원 정보·물류체계 개선, 폐자원·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의 가시적 성과 도출

### 1)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제도 강화

#### ①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폐전자제품 재활용 확대

- 재활용 대상제품 범위 확대, 의무율 부과방식 및 의무이행방안 개선 등 재활용체계 강화('11.9, 법률개정안 국회제출)
  - 현행 10종의 제품을 모든 전기·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, 품목별 재활용 의무량 방식에서 국민 1인당 재활용량 방식으로 전환
  - 출고량 또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공정한 비용부담체계를 구축하고, 생산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양을 기준으로 판매업자의 폐제품 회수·인계의무 부여('11.11)

#### ② 가전제품 수거·재활용체계 개선

- 대형가전제품 회수체계 개선 및 불법처리 단속
  - 지자체의 폐가전 재이용 확대 및 적정처리 보고체계를 구축하고, 대규모 고물상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불법처리 단속 강화('11.7)
- 소형가전제품 및 폐휴대폰 분리배출제 도입('11.6, 新수거체계)
  - 생활쓰레기에 혼재·배출되는 소형가전제품·폐금속을 캔·플라스틱 등과 같이 분리배출 대상 품목으로 지정(부산시·전남도 2개 광역단체 대상 시범사업 추진)

## 2)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

### ① 재활용 목표율 제고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 강화('11.9,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)

- 폐자동차 재활용 목표(~'14 85%, '15~ 95%) 달성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자 책임제를 도입하고, 정부-생산자 공동으로 폐차 공정 기술 및 유가자원 회수 R&D 투자 추진('11~'20, E-I사업)

- 유해물질 사용제한, 재활용정보 구축·제공 등 환경성보장제 의무대상 종류\*를 단계적으로 확대

\* 환경성보장제 의무대상 확대 : 현재 승용차·승합차(9인승)·화물차(3.5톤 이하) → 대형버스·화물차 → 모든 차종('19)

- 해체 재활용업, 파쇄 재활용업 및 폐가스처리업의 관련기준 구체화 등 폐자동차 재활용업의 시설·재활용기준 강화('11.9, 법률개정안 국회제출)

\* 해체 재활용업(실내작업장, 유류회수기 등 구비토록 기준 구체화), 파쇄 재활용업(파쇄기·선별기에 대한 시설기준 명확화) 등

### ②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자원순환성 고려

- 유해물질 기준초과 여부 모니터링 및 기준 초과제품에 대한 개선·사용중지 명령, 유해물질 종류·기준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(환경과학원 등) 지정·운영('11.9,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)

- 한·중·일 3국 장관회의(TEMU), 아시아자동차환경포럼 등을 활용한 국제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아시아 협력강화 및 국제 표준 주도 노력

### 3)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

#### ① 폐자원 물류체계 개선과 재활용산업 육성

- 폐자원 물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거점 지역에 재활용산업 집적화
  -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(전주·단양권) 마무리('06~'13) 및 2단계 사업추진('11~)
  - \* 수도권, 영남권 등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금속 재활용산업 등 대기업-중소기업을 집적화하고, 특화단지 내 업체간 협력·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
  - 민간(산·학·연)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, 정부는 공동시설 구축 및 정보·기술지원 등 지원 역할 수행
- 폐기물을 지역 내에서 1차 재활용(선별, 파쇄·압축)하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들의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
  - 폐기물처리시설(소각·매립·에너지화시설 등)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재활용 부산물 등을 에너지화·소각·매립으로 연계 처리

#### ② 폐자원의 수요 공급 및 흐름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

- 폐자원의 발생-재활용-처리 단계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·컨설팅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및 지원센터 운영

#### ③ 생활계 유가자원의 수거·재활용체계 구축

- 소형 조립제품·폐가전, 가정 및 사무실의 불용물품 등 수거·재활용이 미흡한 생활계 유가자원에 대한 수거체계 확대
  - \* 분리배출, 역회수 방법을 통한 수거, 민간수집상 활용 등
- 권역별 자원순환사업소\*를 설치하여 폐자원 분리·선별 및 공급
  - \* 실업자, 취약·저소득층을 우선 고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(직영, 위탁)하되, 지자체·EPR 공제조합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 검토

## 4) 폐자원 ·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

### < 추진전략 >

- ◆ '12년 국가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(3.52%)의 60%를 폐자원 ·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실현(1차 에너지 공급의 2.12%)
- ◆ '12년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서 원유 49만 배럴 상당의 에너지 생산(53천 가구의 사용량)

### ① 권역별 환경에너지 타운, 자원화 시설을 거점으로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기반 확보

- 가연성 및 유기성 등 폐기물 자원화 시설 41개소 설치 추진
  - \* RDF 제조시설 15개소, 전용보일러 3개소, 바이오가스화 시설 20개소, 소각여열 회수시설 2개소,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1개소
-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사업 추진 및 본 사업을 위한 지역별 기초조사, 사업 목표 · 추진방식 개선방안 마련('11.12)
- RPS(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), RFS(바이오연료혼합 의무사용제), 발전차액 지원 등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

### ② 수도권 환경·에너지 종합타운을 에너지 자립형 타운으로 조성

-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및 바이오순환립,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통합 생산 기지 구축, 에너지 자급형 종합타운 기반 조성
  - \* 매립가스 자원화시설(50MW), RDF 제조시설(200톤/일),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(500톤/일),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시설(10m<sup>3</sup>/분), 하수슬러지 연료화 시설(1,000톤/일) 등 확충
-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 구현
  - \* 바이오가스를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 · RDF시설의 열원으로 활용, 침출수 처리장 음폐수 바이오가스를 청소차량 연료로 사용 등

### ③ 폐자원에너지의 고부가 가치화 및 민간기술 개발 촉진

- RDF 품질향상(RDF 25천원/톤 유상판매) 등 수요처 요구에 맞는 품질의 다양화로 고부가 가치화
-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(50MW)의 CDM사업('07.11~'08.12, 2·3차분) 추진으로 약 80만 톤의 탄소배출권 확보(약 140억원 상당)
- RDF 전용보일러 등 민간부분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부와 민간이 기술개발 병행 추진

### ④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
-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수요조사 및 기술개발 로드맵 기획('11.10)
- 특성화대학원 지정, 교육·평가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
- 고품연료제품 수요·공급 관리,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관리체계 마련

### ⑤ 농수산·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부처협력 강화 (환경부 등 4개 부처)

-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퇴비·액비화 시설 등 9개소 설치 지원, 4대강 수변구역 매수토지 활용 에너지 수종 및 바이오순환림 371천㎡ 식재(환경부)
- 여수세계박람회 바다숲 70ha 등 연안지역 바다숲 조성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연구사업 추진(농식품부)
- 바이오수소, 바이오디젤, 바이오알콜 생산기술 개발(국토해양부)
- 바이오순환림 조성(8,000ha),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 수집 및 목재펠릿 제조·보급사업 추진(산림청)

## 5) 폐자원의 가치상향형(up-cycling) 재활용체계 구축

### 1] 재활용의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체계로 전환 촉진

- 포장재 재질·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 방안 마련('11.6), 민·관 사전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('11.9), 법제화 추진('11.12~)
- 생산자책임재활용(EPR) 의무대상 기업의 자발적 재질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EPR품목 재질별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 추진('11.12~)
- 고부가 가치 재활용품 생산 촉진을 위해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 방법별 가중치 부과
- 재활용품 품질확보를 위해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표준 비용 기준(안) 마련('11.12)

### 2] 건설폐기물의 고부가 가치 재활용 확대

-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대국민 인식전환 등을 위해 홍보자료 배포('11.5)·견학프로그램 운영('11.10)·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('11.11)
- 순환골재 사용 의무대상기관, 사용용도·비율 확대방안 마련('11.12)

### 3] 유기성·가연성 폐기물의 고부가 가치 자원화 추진

- 유기성폐자원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를 친환경 자동차연료로 공급
  -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준공 및 시범운영('11.6~, 시내버스 220대 공급·사용)
  -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(RFS), 친환경 자동차연료 사용 권고제도 등과 연계하여 자동차의 바이오가스 연료 공급 확대 추진
- 고형연료 제품 원료를 사업장 가연성폐기물로 확대하고 혼합 제조 허용방안 마련('11.12)

## 라. Top 환경기술 개발

- ◆ 환경 R&D 과제발굴부터 성과확산까지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개선하고, 시장성이 높은 도시 광산 고도화기술, 그린 카 기술, 고도 수처리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·집중

### 1) 성과지향형 환경R&D 체계 구축

#### ① 새로운 10년의 중장기 환경기술개발사업(E-I) 추진('11~'20)

-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수출유망 및 수입대체기술 개발을 위해 **Eco-Innovation** 기술개발사업('11~'20) 본격 추진
- 수출형 원천기술, 시스템기술, 플랜트 기술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 개발하는 「글로벌 탑 기술개발사업단」 구성·운영('11.5)

#### ② 과제 발굴부터 성과 확산까지 전 주기 과제 관리체계 구축

- (과제발굴) 기업, 학계, 정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상시 과제제안시스템 구축('11.4)
- (과제선정)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구매 조건부 R&D과제, 대-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과제 등 발굴·선정
- (과제관리 및 성과활용) 조기 성공과제 인센티브, 불량과제 조기 탈락 등 관리를 강화하고, Test-Bed 사업 지원 및 우수기술 전시·설명회 등 성과홍보 확대

#### ③ 미래 환경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 기획 및 장기 R&D 로드맵 수립

-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별 대형 R&D사업 기획 및 타 부처 공동 사업에 참여하고, 미래 대응 중장기 환경 R&D 로드맵 수립('11.12)



## 2)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 개발

### < 추진 목표 >

- ◆ 선진국 대비 60~70%인 환경기술 수준을 2020년까지 70~80%로 제고,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 10% 이상 달성('05 3.3%)

#### 1] 청정수 프로젝트(고도 수처리 및 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)

- 미래 물 부족, 물 수요 고급화에 대응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 및 물산업 육성 기반기술 개발

\* 막여과 시장은 '07 61억 달러 → '16 303억 달러 성장 전망('08, GWI)

- 21세기 블루골드인 세계 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**분리막\*** 제조 및 **모듈화** 기술, **관망관리 최적화 시스템** 개발 등 핵심·원천 기술 확보

\* 수처리 화학물질 사용 저감, 프로세스 자동화로 유지관리 비용 및 시설 소요 부지를 최소화하는 등 '15년까지 세계 정수시장의 60% 이상 점유 전망

- 대용량 역삼투압 막여과(ROF), 고성능 로봇 이용 관망 감시센서, 유량·수질 실시간 측정·제어기기 등 **핵심부품 개발**

- 첨단 정수처리기술인 막여과 중심의 지능형 정수처리 **플랜트** 기술, 맞춤형 관망 설계, 유량·수질 실시간 측정·제어, 상수관망 **비파괴 진단 및 비굴착 보수기술** 등 개발

⇒ 전체 수자원의 6.6%(22.4억톤)를 재이용수로 공급, CO<sub>2</sub> 10만톤 저감('13),

⇒ 물산업 내수시장 확대('08 12조원 → '13 17조원) 및 수출촉진('08 15억불 → '13 36억불)

## ② 유용자원 순환 고도화 기술('11~)

- 유가·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자원경쟁에 대응하고 폐기물 수거·처리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 **폐금속자원 회수·재활용기술** 개발
    - \* 유가·희유금속 재활용은 천연 추출·가공보다 총에너지 소모량 20% 이상 절감
    - 산업 활동 부산물 선별·회수·무해화, E-Waste의 유가자원 회수·추출, 폐유·폐용제 재활용, 필름류에서 화학원료 회수기술 개발
- ⇒ 도시 광산 고도화 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7,000억원 이상 창출

## ③ 오염물질 배출을 극소화한 고성능 그린 카 기술('11~)

- 세계 4대 자동차강국 도약을 위해 **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대응기술** 개발
    - \* EU는 '12년부터 CO<sub>2</sub>배출량을 평균 130g/km로 규제
    - 신연소방식·슈퍼클린디젤·에코드라이브시스템 등 오염물질 저감, 차세대 천연가스·연료혼소 차량, 바이오디젤(BD30) 엔진 등 개발
- ⇒ 그린카 기술 개발로 CO<sub>2</sub> 2천만 톤 저감('20), 부가가치 10조원 창출

## ④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on-CO<sub>2</sub> 저감 기술('12~)

- 기술개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**CO<sub>2</sub> 이외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관리대상인 5개 온실가스 물질에 대한 저감기술** 개발 필요
    - \* 국내 Non-CO<sub>2</sub> 온실가스(CH<sub>4</sub>, N<sub>2</sub>O, HFCs, PFCs, SF<sub>6</sub>) 배출은 72백만CO<sub>2</sub>eq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.3%('05)
  - 매립지 CH<sub>4</sub> 고효율 포집·회수·정제, 고효율 촉매 분해 장치, 분리막 및 플라즈마-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분리·농축기술 개발 등
- ⇒ 온실가스 저감 및 Non-CO<sub>2</sub> 가스 에너지화 동시 달성

### 3. 사람·환경·시장의 조화

#### 가.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

- ◆ 저소득층, 환경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, 어린이·노약자 등 환경 민감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복지 강화
- ◆ 국민이 원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및 국토·자연자원의 현명한 관리·활용

#### 1) 낙후지역과 서민·민감계층을 배려하는 환경복지 강화

##### 가) 물 복지 구현

##### ① 농어촌 상수도 서비스 보급 확대

- 농어촌·도서 등 급수취약 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지속 추진 ('11, 농어촌 177개 사업 2,500억 원, 도서 51개 사업 440억 원)
  - \* '09년 51%인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'20년까지 78%로 단계적 제고
- 마을하수도 설치 확대(280개소, 2,103억원) 및 기존 노후시설 정비(74개소, 181억원)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및 수질 개선 도모
  - \* '09년 53.3%인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'20년까지 75%로 단계적 제고
- 마을하수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에 적합한 최적공법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('11.6)
  - \* 국고지원 또는 시설 설치승인시 반영하여 지자체 협조 유도

##### ② 저소득층 상수도 보급·개량사업 지원

-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대상을 자가 주택 소유자에서 영구임대 아파트의 동일 거주구역 거주자 전체로 확대 시행('11 1,820가구 지원)

- 상수도 미보급지역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(약 6천 개소 추정) 대상 먹는 물 수질검사 무료지원 추진('11 1,000개소 지원)

### ③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

- 다양한 오염물질을 정화 할 수 없는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
  - \* '17년까지 61개 지자체 125개 노후(낙후) 정수장 리모델링 추진
-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·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('11.5)으로 녹물 등 이물질이 없는 청정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
  - \* 인증센터 구축('11.3), 시행규칙 제정('11.5) 등 인증 시행준비
- 개인주택,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수도관 점검을 의무화하고 문제점 발견 시 관망세척, 갱생, 교체 등을 법제화하여 공급과정에서의 수돗물 품질저하 방지
  - \* 개선안 마련 및 수도법 개정 추진('11~)
- 막여과 정수처리 기술 등 고도정수처리 선도기술 도입 촉진
  - 총 13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('11, 계속 10, 신규 3)
  - \* 고도정수도입 목표율 : '00 14% → '08 17% → '15 30%
-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·관리 강화, 포름알데히드 등 먹는 물 수질기준 감시항목 추가 지정('11.12)

### ④ 대대적인 상수관망 정비 추진

- 수돗물 공급 시스템(관망, 배수지, 가압장 등)의 체계적 정비로 국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관망 정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('11.4)
- 재정지원과 함께 BTL 등 민자 사업 방식 도입을 통한 대대적인 관망정비로 누수율 저감 추진
  - 상수관망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투자 확대로 '20년까지 녹물과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상수관망 체계 구축

## ⑤ 하수도 침수피해 방지 및 악취제거

-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기능 강화로 하수도 기능 선진화
  - 하수관거 및 빗물펌프장 강우확률빈도 상향조정(10년 이하→10~50년) 및 유지관리지침 개정('11.3)
  - 우수관리를 위한 다기능 하수저류시설(이송, 침수예방, 비점오염원 저감 등) 시범설치('11)
    - \* 침수 시뮬레이션 활용,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하수도시설 설치계획 수립('11.12)
- 대도시 지하에 대형 빗물 저장터널 설치 추진('11~'20)
  - 서울 양천, 강서구 침수방지 선도사업 착수('11, 100억원)
    - \* 홍수예방, 비점오염저감, 기후변화 대응, 도로침수 등 다목적 기능
- 하수도 CSOs 및 악취 개선방안 마련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민 생활환경 개선 및 향기로운 도시조성 추진
  - \* 각 시설별 현황 파악('11.6), 성능개선 매뉴얼 작성('11.9), 지자체 보급('11.10)

## ⑥ 환경 친화적인 깨끗한 음용 지하수(상수도) 공급 확대

- 소규모 수도시설의 우수 관리모델(Best Practice) 개발·보급
  - 수질, 운영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('08~'14)에 반영·추진
    - \* 현황 파악('11.3~6), 모델 마련('11.10), 지자체 보급('11.12)
- 하천표류수 중심의 취수체계에서 탈피하여 취수원 다원화
  - 강변 여과수 등 하천표류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('11 3개소, 170억원)
  - 먹는 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·취향에 부응하고, 수질오염사고 시 수돗물 대체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수돗물, 먹는 샘물과 차별화된 천연 도심샘물 공급 준비
    - \* 기초 연구사업('11), 시범사업('12), 본 사업 추진('13~)

## 나) 석면피해 구제 및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강화

### ① 석면피해의 사전 예방 및 구제제도 시행

-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정('11.6) 및 하위 법령 마련('11.12)
  - 석면함유가능물질(탈크 등) 석면함유기준 설정,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,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
-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시행으로 석면피해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('11.1)
  - 석면노출피해자 **요양급여·생활수당**(폐암환자 약 91만원/월) 지급
    - \* 석면사용 혜택을 공유한 국가·산업계가 분담하여 「석면피해구제기금」 조성
  - 권역별 석면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건강검진·조사 등을 통해 건강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구축
- 농어촌 등 노후 슬레이트지붕의 안전 처리체계 구축·지원
  - 석면 슬레이트의 비용효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, 영세 농어가 처리비용 일부 지원('11, 2,500동)
    - \* 시범사업 후 '20년까지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지붕 18만동 처리·지원대책 수립

### ② 환경성질환 예방 및 피해구제제도 도입 추진

- 오염취약지역 주민 건강피해조사 확대
  - 대형 국가 산단(2개), 폐금속광산(7개), 시멘트공장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,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기오염 취약시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환경보건평가 추진('11.12)
- 석면 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도입방안 검토
  -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입법화 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('10~'11)

### ③ 민감 계층인 유아·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

- 아토피·천식 예방·관리 대책 수립 추진(보건복지부 협조)
  - 아토피·천식 유발요인 규명 및 관리지침을 보급하고, 환경성질환 상담서비스 및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센터('11, 4개소) 등 인프라 확충
- 저소득층·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내 환경 보건실태 점검·개선서비스 확대('11, 전국 6개 권역 1,200가구)
  - 서비스 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환경보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
-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('16~'18),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('11, 500개소), 스쿨존 환경오염 실태 조사 등 친환경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추진
- 사용 중인 어린이용품(70종)에 대한 환경유해인자(20종)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, 유해성기준 초과 어린이용품은 유통 제한 추진
- 산모·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노출 권고 기준 도입방안 마련
  - 환경노출 저감을 위한 생활가이드라인 보급('11.3)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 권고기준 도입방안 마련('11.12)
- 스쿨존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어린이 환경기준 도입 추진
  - 스쿨존에 대해 대기오염도 등을 평가하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 도입 토대 마련
- 어린이, 학교 교사 대상 환경보건 교육 강화
  - 맞춤형 교재 개발 및 초·중·고교 교장단 대상 정례 교육 프로그램 마련

## 다) 중소기업 지원 및 나눔 문화 실천

### ① 중소기업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

-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 부담금 개선대책 시행('11.1)
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의 '10년분부터 '12년분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의 50% 감면(1,264개소)
  - 병원에서 지정폐기물로 처리 중인 1회용 주사기를 폐기물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
  - 정부-산업계의 자발적 협약 확대를 통하여 제품 출고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

### ② 서민에게 다가가는 나눔 문화 실천

- 지자체 및 지자체 지정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재사용 가능한 중고가구의 저소득층 무상지원('11, 4천여 가구) 및 인테리어자재를 재활용한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검토·추진
- 저소득층,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체험기회 제공(바우처 제도) 및 1사·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한 나눔 문화 실천
- 대기업, 지자체, 비영리법인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환경 분야 (예비)사회적 기업 지속 발굴·육성('10 70개 → '11 120개)
  - 사회적 기업 운영자, 산·학 전문가로 구성된 「사회적 기업 정책협의회」 운영을 통하여 관련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
  - 지자체 공공선별장, 건강도우미,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고용률이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대상 집중 육성



## 2) 국민 생활공감형 환경정책 확대

### 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강화

-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소음, 악취 등 환경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고, 환경·기상서비스 개선

|   |   |
|---|---|
| <p>생활소음<br/>줄이기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,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, 소음지도 작성 지원, 소음 인체영향도 조사 등</li> <li>· 가전제품 소음등급제 도입 검토(국내외 실태조사 및 전문가 포럼 운영), 저주파 관리방안 연구</li> </ul>  |
| <p>인공조명<br/>관리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빛공해 시범사업, 빛공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</li> <li>·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정으로 쾌적한 야간 빛 환경 조성(법률안 국회 심사 중)</li> </ul>   |
| <p>생활악취<br/>저감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거나 민원 집중 발생하는 산업단지 대상 오염물질 포집 및 공공처리 추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 밀집 시화국가산단(염색), 인천서부지방산단(주물) 대상 시범사업 추진(타당성 조사)</li> </ul> </li> <li>·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별 개선대책 마련('11.9)</li> </ul> |
| <p>도로 오염물질<br/>저감<br/>(자동차배출가스,<br/>비산먼지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도시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 엔진개조, 조기폐차 등('11, 77천대)</li> <li>- 오염물질 많은 노후 건설기계 대상 시범사업('11, 100대)</li> </ul> </li> <li>·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및 물청소 등 저감대책 추진</li> </ul>               |
| <p>수요자 중심<br/>기상서비스<br/>제공</p>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등 국민 공감의 기상서비스 확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기지수('11.1) · 교통기상지수 제공('11.7), 황사·폭염 등 보건기상정보 문자서비스('11.6) 등</li> </ul> </li> </ul>   |

## ② 국민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관리 강화

- 국민 건강을 직접·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, 수은, 라돈 등 환경위해요인 관리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다중이용시설<br/>· 지하역사<br/>실내공기 관리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민의 공공 생활공간인 지하역사·상가, 대형점포·보육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</li> <li>-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, 고속버스 등 관리기준 마련, 지하역사 석면뿔칠 제거 등 강화</li> </ul>   |
| <p>라돈 및 수은<br/>관리·저감</p>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택 라돈농도 실태조사 및 저감 시범사업 추진, 라돈농도 실태조사, 라돈저감 시공업체·전문가 육성방안 마련</li> <li>· 국민 혈중 수은농도 저감을 위한 수은 사용·배출시설 관리, 어린이 등 민감계층 수은노출 건강영향조사, 국제 수은 관리협약 논의 대응</li> </ul>   |
| <p>전자파<br/>조사·관리</p>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핸드폰 등 전자파 건강영향조사(11), 국제적 권고를 토대로 전자파 노출저감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예방 정보제공 확대</li> </ul>   |
| <p>미세먼지 및<br/>오존 예보</p>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도권 및 5대 광역시까지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, PM<sub>2.5</sub> 기준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</li> <li>· 광양만 등 고농도 오존현상 빈번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예보모델 개발(11.12)</li> </ul>   |
| <p>특정대기유해<br/>물질(HAPs)<br/>관리</p>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정배출 HAPs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도입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388종 HAPs의 대기배출량(47,430톤/년)의 54.3%는 공정배출</li> </ul> </li> <li>· 업종별 HAPs 공정배출 분석, 시범사업 추진 후 법제화 추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개인하수도<br/>공공관리<br/>활성화</p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인하수도 시설 설치·운영 관리를 개인에서 지자체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</li> <li>- 운영비용, 소음발생 등의 사유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가동을 기피하여 발생하는 상수원 오염사례를 방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2~3개 읍·면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 |

### ③ 안전한 환경을 위한 환경관리 시스템 선진화

- 환경관리 인프라를 개선·정비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국 구현에 기여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안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</p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2년까지 매연 없는 천연가스버스 28천대를 보급하고, 천연가스버스 안전관리 강화</li> <li>- 안전한 가스용기(Type3 용기) 보급·교체 지원, CNG하이브리드버스(30대) 시범 보급</li> </ul>   |
| <p>화학물질 등록·평가제도 도입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유통 중인 화학물질 독성·위해성 평가, 등록·정보 공유체계 구축</li> <li>* 화학물질의 85%(3만7천종)는 안전성 입증자료 없이 유통</li> <li>- 화학물질 등록·평가 등에 관한 법안 국회제출('11.12), 독성분석 전문 인력 양성 및 요소기술 개발 등</li> </ul> |
| <p>생활주변 화학물질 안전 관리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10개 화학물질을 국가 우선관리대상물질로 선정·관리</li> <li>· 화장장 다이옥신 대상물질 다이옥신기준 및 범정부 나노물질 안전관리대책 마련</li> </ul>   |
| <p>재해기상 예보 강화</p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(~'19), 우주기상 예·경보 체계 구축(~'14), 범정부적 레이더자료(27개소) 통합 활용기반('11.10) 구축 및 지진정보 SMS 제공('11.5)</li> </ul>   |
| <p>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</p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기오염물질을 물성, 독성, 노출, 위해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 구축</li> <li>· 대기오염물질을 감시물질, 관리물질, 환경기준물질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</li> </ul>  |
| <p>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</p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수원 상류지역에 상수원 안정성을 저해하는 공장시설 입지를 엄격히 관리하여 먹는 물 안전성 확보</li> <li>-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·고시('11~'12), 세부운영지침 작성·교육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)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전략

#### ①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전략

-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·관리를 유도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관리·활용전략 수립
  -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보호·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우수사례를 발굴·공유

#### <우수사례 예시>

|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|
| 순천만 갯벌    | 보호지역 확대·관리,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, 자연환경이용시설 확충, 대표적 생태관광지 마케팅  |
| 천수만 철새도래지 | 간척농지 생산품의 청정이미지 부각<br>철새도래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|
| 창녕 우포늪    | 핵심자연자원을 습지에서 따오기 종복원으로 확대, 친환경농업 및 지역농산물 마케팅, 국제환경회의 유치 |
| 무안 회산백련지  | 백련을 신산업 아이템으로 인증·마케팅<br>백련축제·이벤트, 연꽃길·물새 등 자연자원 확대      |

- 지역의 핵심 자연자원 분류, 관리·활용전략\*, 활용유형 모델화 등 관계부처 합동의 자연자원 현명한 이용계획(안) 수립('11, 기초연구)

\* 보호지역 지정, 생태·자연자원 복원·창출, 자연환경이용시설 확충, 보호지역 공간계획 수립, 생태·문화 체험프로그램, 지역 브랜드화·마케팅

- 자연자원 보호 및 현명한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(가칭)자연자원의 현명한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

- 자연자원 통합관리계획 수립, 산재된 보호지역 지정·관리규정 통합, 추진체계 구축 및 부처별 역할분담, 지역사회 이해 고려 및 주민 참여보장, 정부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

\* 뉴질랜드 통합적 자원관리법('91) : 자연자원관리 통합계획, 인·허가절차, 오염규제·환경보전, 기존 법률 정비 등 규정

## ② 수도권매립지의 환경관광 명소화 및 지역 활성화 전략

### ○ 수도권매립지 환경·관광 명소화 조성 기반 구축

- 관광·마케팅·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**환경관광 명소화 위원회** 구성 및 환경관광 명소화 **마스터플랜** 수립('11.4)

- 일몰 감상 전망대, 노천카페, 친환경매립·자원화, 바이오·자연력 에너지·환경문화공간 등 **테마별 투어코스** 개발('11.10)

\* 폐자원에너지화 시설, 녹색바이오공원 등 체험 가능한 시설중심으로 우선 운영

### ○ 경인 아라뱃길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 에코투어 운영('11.10)

-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수도권매립지 **투어버스 예약제 시범운영**('11.10)

\*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의 가스를 활용하는 바이오가스차량 운영

- 경인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와 매립지내 안암호, 녹색바이오단지 등 연결 추진 및 경인 아라뱃길 인접 부지에 **쉼터·탐방로** 개설

- 매립지 국화 축제와 경인 아라뱃길 개통식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

- 국립생물자원관, 한국환경공단, 강화갯벌, 인천 시티투어 등 주변 **환경·문화 시설과 연계한 에코투어 프로그램** 개발('11.10)

\* 초·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현장견학 정례화 추진(교육당국과 협의)

### ○ 녹색성장 실천 현장으로서의 수도권매립지 환경·관광 홍보 강화

- 탐방객 유치를 위해 **한국관광공사** 협의 및 국·내외 여행사 상품화

- 환경 분야 발표회, 대규모 공연,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 유치

- 국내·외 기자 및 사보협회 등 **초청행사**(팸투어), 방송매체(공중파, 케이블, 라디오 등) **기획보도** 추진

### ③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생태관광모델 창출

-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및 인증제 도입,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
  -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('10~'12), 탐방휴양시설 건립(~'13), 자연환경해설사 및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('11.4, 법률개정안 국회제출), 국제행사 연계 외국인 생태관광 및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('11.6)
- 지역단위 및 국제적 생태관광 지원네트워크 구축('11.6)
  - 지역단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, 언론, 민간단체,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
  - UNEP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국제파트너십 가입 등 국제협력 강화
-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 확대 운영(연중)
  - 지역별 국립공원, 지자체, 지역주민, 민간단체,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「생태관광 바우처 심의위원회」 운영
  -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수학여행 생태관광 바우처\*등 서민·취약계층 생태관광 기회 제공 및 사회적 나눔 문화 조성
  - \*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수학여행 경비 50% 지원(약 8만원)
- 생태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뉴미디어 홍보, 생태관광 블로그 및 사진 공모전 개최, 내나라 박람회 등 관광행사와 연계 홍보(연중)

### ④ 도시공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위한 녹색도시 모델 확산

- 강릉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, 친환경 건축, 녹지·생태공간, 탄소중립 등 녹색기술을 반영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모델개발
- 기존도시에 적용 가능한 입지·환경적 특성에 맞는 유형별 녹색도시 재생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('11.9, 시범사업 대상 선정)

## 4) 국민의 심터 국립공원의 명품화 및 관리체계 개선

### ①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명품화 전략

- 국립공원별 특성, 현장여건을 반영한 대표브랜드 선정·마케팅('11.3, 선정안 마련)
  - 경관·생태 중심(10개), 역사문화 중심(6개), 인물 중심(1개), 동물자원 중심(2개) 등 국립공원별 핵심자원, 대표브랜드 검토
  - \* (예시) 경관(설악산 울산바위, 내장산 단풍 등), 역사문화(경주 신라문화 등), 인물(한려해상 이순신), 동물(지리산 반달가슴곰 등)
- 국립공원별 핵심자원, 대표브랜드를 활용한 공원관리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로 탐방문화의 다양성 제고
  - 경주국립공원 '신라를 내 품에' 등 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1공원·1대표 프로그램 개발·운영('11.6)
  - 탐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가족단위 탐방휴양시설 조성, 노약자 등을 위한 저지대 탐방 둘레길, 오토캠핑장 등 국립공원 대표 브랜드와 부합하는 국립공원시설 확충('11.11)

### ② 핵심 생태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·관리

- 생태계가 우수하게 보전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신규 지정 추진('88년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 후 신규지정이 없음)
  - 국립공원 신규지정(안) 타당성조사('11.5), 관계부처 협의·설명회('11.6), 국립공원위원회 상정·심의('11.12)
  - 국립공원 신규지정 확정 및 관리('12.1~)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립공원 관리전략 수립 및 대국민 홍보 강화(관계부처 합동)

## 5)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 선진화

### < 기본 방향 >

- ◆ 피해액 산정의 공정성 제고 및 피해 유형별 배상기준 합리화
- ◆ 환경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분쟁절차 신속화

#### 1] 환경피해 유형별 배상기준의 합리화 및 신뢰도 제고

- 피해유형별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·현실화('11, '12)
  - \* 배상기준 최초 제정('99.12)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으나 국민·사회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한 수준
  - 생활소음·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(30%) 조정('11.1 시행)
    - \* (예) 피해기간 1개월, 초과정도 5~10dB미만시 현행 170천원 → 221천원 상향
  -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범위를 연도별로 확대·추가

|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| '11.1월 이후 시행     | '12.1월 이후 시행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과수피해 범위 확대 | 딸기·참외<br>· 고추 | 사과·배<br>· 복숭아·포도 | 토마토 등        |

#### 2] 환경분쟁조정 사건처리기간 단축

- 정례 재정회의 확대, 표준축약심사보고서, 배상액 자동계산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법정처리기간(9개월) 보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·운영
  - 소음·진동·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은 5개월 이내, 소음·진동 외 재산·영업 등 복합피해사건의 경우 7개월 이내 처리 추진
- 사건처리현황 점검·관리, 심사관 전문성·조정역량 강화 추진



## 6) 삶의 질 제고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상서비스 제공

### < 추진 배경 >

- ◆ 최근 특이기상으로 인한 기상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상예보의 중요성 증가
- ◆ 재해기상 예보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상산업 육성 및 선진 기상인프라 구축 필요

### □ 재해기상 예보역량 강화

- 강수량 예측성능 향상을 위한 고해상도(1.5km) 재해기상 국지 상세예보모델 구축·운영('11.7)
  - ※ 12시간 예측모델 1일 1회 시험운영('11.7) 및 1일 8회 현업운영('12.6)
- 예보역량 향상을 위한 예보관 모의훈련 시스템 및 훈련교재 개발('11.9),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및 과거 유사사례 일기도 검색시스템 구축('11.11)
- 위험기상 조기탐지를 위한 기상관측선 서해 집중배치 운영 및 천리안 위성 정규서비스('11.4)
  - ※ 16종의 천리안 위성자료 생산 및 위험기상 시 8분 간격 영상 제공(기존 30분)

### □ 국민 공감의 기상서비스 확대

- 기상정보의 종류, 형식 등을 수요자가 직접 선택·수신하는 주문자 방식의 기상서비스 제공('11.6)
- 강우강도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호우특보 기준 정비('11.6)
- 국민건강과 교통안전을 위한 감기지수('11.1), 교통기상지수('11.7) 제공 및 소외계층을 위한 폭염, 황사 등 보건기상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확대('11.6)
- 트위터, 미투데이 등 뉴 미디어를 이용한 지진정보 제공('11.5)

## □ 기상산업 육성 및 수출 산업화

- 무역수지 적자해소('08~'09, 141억원)와 기상장비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상장비 국산화 추진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
  - 첨단 기상장비 성능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(~'13)
    - ※ 목측요소 자동화(~'13), 극소형·저전력 다목적 첨단 기상센서 개발(~'14), 이중편파 소형기상레이더 기술 개발(~'13)
- 사업자 기술지원을 위한 기상기술 민간 이전 및 미래수요 대비 기상산업기술 개발(~'13)
  - 물류, 항공, 건설 등 산업수요별 기상정보 콘텐츠 기술 개발 및 날씨 요소별 영향도 분석 등 산업별 날씨경영 기법 개발

## □ 선진형 기상인프라 구축

- 기상예측기술 자립을 위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(~'19)
  - 「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 사업단」 발족('11.3) 및 기본설계('11.12)
- 천리안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(~'17) 및 태양활동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우주기상 예·경보 체계 구축(~'14)
- 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레이더자료 분석 알고리즘 표준화('11.10) 및 레이더 합성 강우량 산출('11.11)
  - ※ 공동 활용 대상 레이더 : 27개소(기상청 11, 국토부 7, 국방부 9)
- 국가 기후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웹서비스 체계 구축('11.11) 및 지역별 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기후지도 개발('11.9)
  - ※ 26개 기관(3,459개 지점)에 분산된 기후자료 통합 품질관리체계 구축
- WMO 세계기상정보통신체계 개발 참여(영국, 프랑스, 호주 공동), 제43차 태풍위원회 개최(1.17~22, 제주) 등 국제기구 내 역할 강화
- 아시아·아프리카 개도국에게 기상재해 대응, 위성자료 활용, 수치예보, 기후변화 예측 등 기상기술 전수로 국가위상 제고

## 나.

### 환경규제 선진화

- ◆ 환경보호 및 친환경적 개발 유도 등 환경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되, 규제방법 및 절차적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
- ◆ 시장의 자율성 및 신규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획일적인 기준 등 합리화

### 1) 환경성평가제도 선진화

#### <환경성평가제도 운영 30년의 성과 및 한계>

| 성과 및 실적   | 반성 및 한계 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환경 친화적 개발계획·기법 제시 등 개발과 환경보전의 실질적인 조화수단</li><li>■ 평가서 공개, 주민의견수렴 등 공개·참여절차 확대로 행정의 신뢰 제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평가자료 축적(DB)·정보제공</li></ul></li><li>■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사전 예측 및 분석 기법의 발전</li><li>■ 오염총량제, 비점오염관리, 건강평가 등 선진 환경정책의 실효성 제고</li><li>■ 환경협의기준 달성, 주민설득을 위한 새로운 환경기술·공법 도입 유도</li>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개발사업 승인기관 관심 부족</li><li>■ 개발사업자의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으로 주민의 재산권 주장 및 갈등 심화</li><li>■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이 환경평가 절차에 집중되나 효과적인 갈등 조정수단 미흡</li><li>■ 과학적 분석·예측 능력의 제한으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정확한 예측 곤란</li><li>■ 환경평가제도 이해부족 및 다단계 절차이행에 대한 불만 상존</li><li>■ 평가 완료 후 멸종위기종 추가발견 등 부실·허위 평가 논쟁 되풀이</li></ul> |

#### ① 환경영향평가 선진화를 위한 법률 및 하위규정 정비

- 제도 선진화를 위한 「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및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·지침 개정 추진(11.12)

- 전략환경평가의 의견수렴 절차·방법 강화, 전략환경평가 대상 행정계획 확대, 평가업종 세분화 및 전문업종(자연생태계조사 대행업 등) 신설, 환경영향평가사 시행방안 등 제도화

○ 전략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지침 등 시행규정 정비

-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 평가 및 최적의 대안 선정방법·기법 개발 보급('11.6), 연접개발 적용범위·기준(안) 마련('11.2)

②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

○ 스코핑제도 운영방안 마련 및 스크리닝제도 시범사업 추진

- 스코핑제도\* 운영실태 분석·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('11.6) 및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 시한 연장(환경영향평가법 부칙 개정, '11.12)

\*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에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

- 환경영향이 적고 스크리닝제도\*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('11.2~12)

\* 사업특성, 환경적 영향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·판단하여 환경영향 평가 시행여부 및 평가 수준 등을 결정하는 신축적인 제도운영방안

③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갈등의 조정

- 평가대행 비용 산출기준(표준품셈) 마련('11.12), 부실평가서 판단 기준 구체화('11.6)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평가방안 마련

-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확대, 사업유형별 온실가스 시범평가서 작성·배포, 우수평가사례 및 기법 발굴

-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의 갈등조정 해소 절차 마련

- 환경성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 및 협의 가이드라인 마련('11.3)

[참 고] 환경성평가제도를 통한 친환경적개발 사례

< 도 로 건 설 >

사업 시행전



당초 계획



평가 이후



로드킬 [Road-Kill]



한해 5천~6천건 발생

생태통로 설치



[ 인천 계양산 ]



< 택 지 개 발 >

**성남갑 아파트-획일화**



**환경친화 주거환경**



경관과 어우러진  
스카이라인  
총고 다양화(5~15층)는  
지율 32%,  
바람길 확보  
친환경 수변공간 조성

(그린벨트 해제 최초 국민임대 의왕 청계지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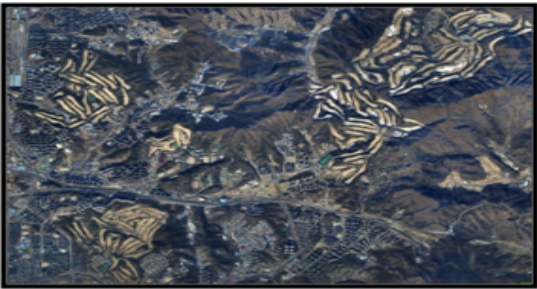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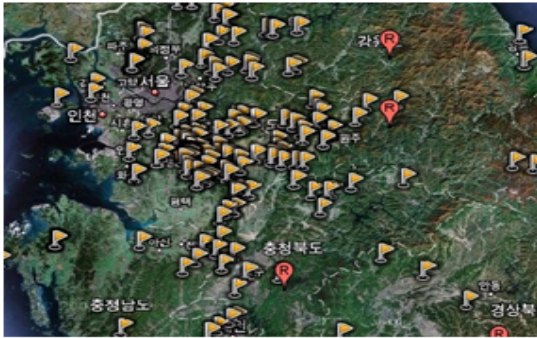
[옥상녹화]



[생태연못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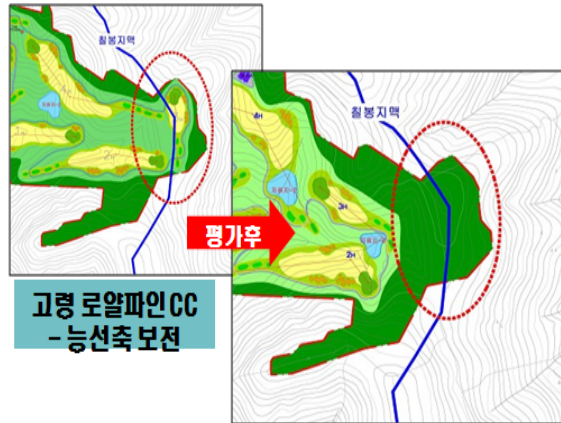
< 체 육 시 설 >

**골프장 난개발**



**경기도 신갈지역**

**환경친화 개발 및 운영**



고령 로얄파인 CC  
- 능선축보전



골프장 무농약 사용,  
지역주민 교육

## 2) 산업수질관리체계 선진화

### < 추진 배경 >

- ◆ 획일적인 입지규제로 입지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규제비용 과다 발생
- ◆ 배출원 특성 및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경직적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제비용 저감,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공정사회 실현 기여

#### 1] 상수원영향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新인허가제도\* 시행 준비

\* 관리대상 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(82개)로 합리화하고 인허가 이후 주기적으로 再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

##### ○ 근거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안 정비 추진('11.6)

\* 국회에 제출된 근거 법률 개정 시기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일정 조정

##### ○ 新인허가제 시행을 위한 업무 처리지침('11.6), 상수원보호 관련 중첩규제 해소('11.9, 고시 개정안 마련) 및 지형도면 고시 개정('11.12)

#### 2] 종말처리구역내 이중투자 방지를 위한 산업폐수 유입절차 개선

##### ○ 소규모 유기성 폐수 직접유입 등 배출시설규제 개선지침 마련('11.10)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해물질 처리효과를 반영하여 특례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완화 항목 확대

#### 3] 수질 TMS를 통한 수질감시 강화

##### ○ 수질 TMS 설치대상 시설을 축산폐수처리장 및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('11.12)

##### ○ TMS 측정항목도 일반항목(5개) 중심에서 유해물질(수은, 크롬, 아연 등)로 단계적 강화

\* 1단계('12) : 4대강 유역, 2단계('13~) :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

#### 4] 오염우심지역 관계기관 합동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('11.10)

##### ○ 지도·점검 강화, 수질·퇴적물 등 수생태계 영향조사 및 중앙부처·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

### 3)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도입

#### < 추진 배경 >

- ◆ 육상공원 위주의 공원구역 용도지구, 행위제한 기준이 해상·해안 및 사적공원에 일률적 적용
- ◆ 국민들의 고급화된 공원 탐방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원별 맞춤형 관리가 곤란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

#### 1] 육상공원 위주의 국립공원 관리체계 개선

- 실태분석, 제도개선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원 특성별 맞춤형 관리체계 도입 추진
  - 국립공원 용도지구 개편 제도개선안 마련 기초 연구 추진('11.2~12)
    - \* 해상·해안·사적 자연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공원시설 발굴, 용도지구 개편 및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개선안 마련 등
  - 국립공원 관리 근거 법률인 자연공원법의 분법화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 연구('11.2~8)
    - \* 자연공원법 중 해상·해안공원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 검토
- 국립공원 관리체계 등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령 정비 착수('11.12)
- 지역별 용도지구 설정안(고시도면 작성 포함) 마련('12.2~12)
  - 해상·해안·사적공원의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공원계획 변경 고시('12.12)

#### 2] 국립공원 내 주민활동 지원 및 행위규제 합리화

- 공원 내 거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지원방안 마련('11.6)
- 공원지정 이전 기존 건축물 증·개축 허용, 영농·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건물 신축 허용 등 행위제한 합리화



## 4) **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**

### ①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통한 녹색금융 및 녹색경영 유도

- 금융기관과 기업 간 환경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기업의 환경정보\*를 분석·제공하는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('11.12)

\*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, 환경부문 투자, 환경법 준수실태 등

- 녹색여신·투자·보험에 필요한 기업의 환경리스크·성과 정보 DB화 및 금융기관 제공 시스템 구축('11.3~'11.12)

- 기업의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녹색경영을 유도하는 기업환경정보공개제도 적용 대상기업 확대 추진('11.11)

### ② 먹는 물 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

-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먹는 샘물 제조·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먹는 샘물 품질점검 강화 및 제조업체별 환경정보 공개

\* 최근 5년간('06~'10)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약 15%

- 위반횟수 등 업체별 환경경영 및 품질관리 실적과 연동하여 차등점검 실시(연 1~4회 차등)

- 부적합제품 제조업체의 정보(제품명, 사업장명, 위반내역 등)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장(홈페이지 상시 게재)

### ③ IT기반 토양·지하수 이력·추적관리 기반 구축

- 토양·지하수 오염원 일체조사('11) 및 DB화하여 Web-GIS 기반의 오염원 이력정보 관리체계 구축

\* 장기적으로 토지 거래 시 국민들이 토양오염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예방 및 공정한 재산권 질서 형성에 기여

## 5) 토양·지하수 환경관리체계 선진화

### ① 토양·지하수 정책수립 지원시스템 구축

- 토양·지하수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 시범사업 추진('11, 안양시)
- 청정 토양·지하수 자원 확보를 위한 전국 토양·지하수 환경지도 제작('11~)
- 지역(Area)단위 지하수 수질조사 및 구역도 작성 시범사업 추진(안성, '11~)
  - \* 토양·지하수 오염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정밀조사 및 환경관리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

### ② 전국 토양정화 종합대책 추진기반 구축

- 국가 소유부지 등에 대한 오염정보를 수집·분류하여 국가오염부지 목록(NCSI : National Contaminated Sites Inventory) 작성('11)
- 환경부·국방부간 환경협력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군환경협력센터 설립 추진('11~)

### ③ 토양정화 활성화를 위한 토양관리단지 조성 및 지원

- 토양기술의 현장화·집중화를 위해 대형 국가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관리단지(Soil Bank Town) 조성
  - 대규모 정화작업이 필요한 장항제련소를 대상으로 토양관리시범단지 조성 추진('11, 실시설계)

### ④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토양정화공제조합 설치

- 상대적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의 토양정화비용을 확보·지원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치 추진
  -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('11.10), 발기인·정관 마련 등('11.12)

## 다. 환경법질서 확립

- ◆ 환경법의 고의적·관행적 위반행위 근절 및 효율적 법 집행방안 강구하여 환경법 질서를 확립
- ◆ 원인자·수익자 부담원칙, 형평성 및 환경보호 공동책임 원칙 등 일반 환경원칙에 부합하는 환경관리제도를 구축하여 환경정의 실현

### 1) 공정한 환경법질서 확립

#### ① 굴뚝자동측정기(TMS) 측정자료 신뢰성 제고

-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부과금을 회피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측정기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
  - TMS 통신방식의 디지털화 추진, 비정상 자료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는 원격 정도검사(QA)프로그램 개발('11)

#### ② 자동차용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경유 유통방지

- 첨가제 개념정의 구체화 및 공급용기 규정 개정
  - 바이오연료 등이 첨가제 형태로 자동차 연료에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첨가제 정의 구체화('11.8, 대기법 개정안 국회제출)
  - 경유용 첨가제 용기규격(2리터)을 휘발유용 첨가제 용기 규격(0.55리터)으로 축소해 유사 경유 유통 방지('11.6, 시행규칙 개정)

#### ③ 원격측정장비 이용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제도(그린패스) 도입

-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저농도·고농도 배출차량에 대한 형평성 제고

- 저농도 배출차량은 정밀검사를 면제하고, 고농도 배출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국민부담 최소화 및 대기질 개선 달성

\* 그린패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('11, 대기환경보전법 개정)

## 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

-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평가 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협의내용 관리 전산화 방안 수립('11.9),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및 책임강화를 통한 협의내용 자율관리체계 구축('11.12)

## ⑥ 음식물류 폐기물 대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

-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, 처리 등의 과정을 전산자료(전자인계서)로 관리토록 하여 불법반출 등 불법적 처리 예방('11.7)

## ⑦ 대형폐기물 수거·재활용 체계 개선

- 대형폐기물의 수집·운반 대행자를 재활용센터 또는 재활용분야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하여 재사용 등 확대('11.6, 관련 지침개정)
-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수수료 합리화 추진

## ⑧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·지하수 오염 관리 강화

-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 수준으로 토양·지하수 오염을 조사토록 유도('11.12, 관련 지침 개정)

## 2) 환경원칙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·관행 개선

### ①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폐기물관리 책임공유제도 정착

-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무임승차 및 책임·의무 회피를 방지하고, 능력과 여건이 양호한 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를 하도록 제도적 유도

| 과 제               | 현황 및 문제점  | 개선 방안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제품 회수 | <p>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만 법적 재활용(수거·처리) 의무 부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폐제품 발생에 책임을 가지며, 효과적으로 폐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회수의무는 기피</li> </ul> | <p>전자제품 판매업자에 제품판매량 대비 일정량의 폐제품을 역회수 하도록 의무 부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원순환 책임의 공유를 통한 사회편익 창출</li> </ul>  |
| EPR 제도 의무이행       | <p>국내기업과 달리 수입업체의 상당부분은 재활용(EPR) 의무 미이행(무임승차)</p>   | <p>재활용의무 회피 가능성이 큰 수입업자는 수입시점에서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무임승차 방지</p>  |
| 음식물쓰레기 위탁관리 개선    | <p>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용역 입찰시 가격 위주로 평가(최저가 입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적격 업체의 불법해양 투기 등 부적정 처리 발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용역 적격심사 기준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료·퇴비 재활용 정상화 추진 및 부적정처리 예방, 우수 재활용업체 활성화</li> </ul> |
| 민간수집상 적정 관리       | <p>신고절차 등이 없어 부적정 처리 시 단속방법 부재</p>  | <p>대규모 고물상 등에 수거·처리 신고제를 도입하여 부적정 처리 방지 및 체계적 환경관리</p>  |
| 청소행정 위탁 관행 합리적 개선 | <p>저가 위탁방식으로 청소대행업체 부실운영 및 미화원 등 근로환경(임금, 샤워시설 등) 취약</p>  | <p>지자체의 대행업체 평가기준에 환경미화원 복지수준을 포함 (관련 지침 개정)</p>  |

## ② 수익자 부담 및 형평성 원칙에 따른 국립공원 이용체계 개선

### < 추진 배경 >

- ◆ 국립공원입장료 폐지('07) 이후 국립공원 혜택의 수익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세금으로 국립공원관리비용 총당
  - 수익자(탐방객)와 환경관리·복원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의 불일치
- ◆ 국립공원 서비스를 장애인, 노약자 등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족

- 국립공원 핵심보전지역 탐방 허가제, 입장료 징수 필요성 검토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('11)
  -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국립공원 입장료의 타당성 및 합리적 징수방안 연구 실시('11.3~10, 공원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구)
    - \* 선택적 입장료 징수를 도입하여 정상 정복형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수평적 탐방 유도로 국립공원의 보전 및 현명한 탐방문화 정착방안 등 마련
  -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정 개정(안) 마련('11.10)
  - 국립공원 입장료 재징수 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('11.11~12)
    - \*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는 다수의 일반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민감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율이 필수적인 과제로서 제도개선은 신중한 검토 선행 필요
- 국민의 국립공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립공원 삭도(케이블카)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립공원별 삭도 설치계획 허용여부 및 친환경적 관리방안 검토
  - 삭도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('11.2), 접수·검토, 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('11.12)
  - 계획·신청된 삭도설치 계획의 내용, 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시범사업 허용여부 및 대상지역 등 결정('12)

### ③ 선진국형 상하수도 요금체계 도입 및 서비스 형평성 제고 추진

#### < 추진 배경 >

- ◆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하수도요금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투자 곤란
  - \* 수도요금 현실화율 80%,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38%('09)
- ◆ 정선(1,348원/m<sup>3</sup>), 평창(1,120원/m<sup>3</sup>) 등 수도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수도요금이 전국 평균(610원/m<sup>3</sup>) 보다 높아 형평성 저해

- 수도사업의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누수관망 정비 등 수도사업 재투자를 위해 **수도요금 합리화 추진**('11~'12)
  - **누진제 확대, 가정용·영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, 수돗물 생산원가 산정체계 개편** 등을 통해 수도사업의 수지균형 도모
    - \* 수도요금 합리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공청회 개최('11.6), 여론조성 및 입법 추진('11.7~)
  - 지자체의 적정 수도요금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(법제화), 표준급수조례 개정 등 **중앙정부의 감독강화**
    - \* 수도요금 현실화 실적, 수도요금 조례반영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및 수도사업 평가에 반영
  - 저소득층에게는 **수도요금 감면을 확대**하여 민생안정 지원
- 하수도요금의 적정 부과유도 및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**하수도요금 공개제도 도입·시행**('11)
  - 하수도요금의 원가산정 항목의 적정성, 규모별·처리공법별·지역별 원가 산출·조사('11.12)
- 낙후지역 수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**재정투자 확대 및 민자(BTL) 도입 추진**

## 라.

## 환경거버넌스 구축

- ◆ 환경중소기업 육성 및 대-중소기업 상생 지원, 환경정책 과정에 정책고객·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확대
- ◆ 범국민적 참여·지지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회의 유치 및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민·관 거버넌스 구축

### 1) 중소환경기업을 위한 민·관 합동 「BEST 프로젝트」 추진

#### < 기본 방향 >

- ◆ 영세한 중소환경기업의 '低성장의 악순환 고리'를 끊고 최고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·관 협력·지원체계 구축
  - 민·관이 협력하여 기반(Base)+향상(Enhancement)+지원(Support)+기술(Tech) 등 4방향 종합 지원전략(BEST 프로젝트) 추진

#### 1] 기반(B : Base\_Best)

-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「투자&규제 로드맵」 마련·제공
  - 환경 매체별 기업체 맞춤형 규제동향, 국내·외 시장 전망, 기술개발 정보 제공으로 예측 가능한 투자계획 수립 기반 마련
- 광역별 환경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육성거점(Hub) 확보
  - 지역별 중소환경산업체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전문 지원센터 설치·지원
- \* 전남센터('09~'12, 생태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), 수도권 환경산업복합단지('12~'15, 물산업, 생물, 토양정화 분야), 대구센터('11~'13, 수처리 분야) 등



## ② 향상(E : Enhancement\_Economical)

- 대-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계 활성화 및 기업 브랜드가치 제고
  -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대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연결하여 시장 개척, 대형 사업 수주 등 상생 추구
  - \* SK에너지를 주축으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간 협력 MOU 체결 사례('10)
  - 대기업 브랜드에 중소기업 제품을 조화시켜 중소기업의 제품의 이미지 고급화 및 해외 진출 기회 창출

## ③ 지원(S : Support\_Strong)

- 글로벌 환경산업 네트워크 및 수주지원체계를 확대·구축하여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·지원
  - 동아시아 중심에서 중동·아프리카·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, 현지 발주처 관계자 등에 대한 인력 DB 제공 등
  -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과 대상 기술의 현지 Pilot 플랜트 설치 및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수주가능성 극대화
- 금융기관 및 녹색뉴딜펀드 등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체계 구축

## ④ 기술(T : Tech\_enTerprise)

- 지자체·공공기관 공동 참여 우수기술 실증화사업 추진
  - 2~3개 우수기술을 선정하여 주요 수요처인 지자체·공공기관과 공동 실증화 사업 추진 및 성공 기술에 대한 수주 기회 제공('11)
- 1:1 기술후견인제(Tech Guardianship) 도입
  - 영세 환경기업과 기술력 보유 전문기관(공공기관, 대학연구소 등) 간 기술개발 공동협력으로 경쟁력 강화

## 2) 정책고객 및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

- ① (기업) 정부 중심의 의사소통 채널을 기업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
  - 기존 의사소통 채널(각종 포럼, 협의회 등)을 통합하여 정례화 하고 정책형성-집행-환류 수단에서 기업의 목소리 반영
  - 보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경제단체(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, 산업연구원, 전경련 등)와의 연대 강화
- ② (시민사회) 녹색생활 국민실천을 확산하는 매개체이자 정부 정책형성의 참여자로서 민간단체 육성
  -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(7대 종단)를 중심으로 종단별 환경지침서('10)에 근거, 본격적인 실천 협력사업 추진
  - 민간환경단체와의 정기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책 강구(NGO 중심의 Me-First 운동 정착 지원 등)
- ③ (학계) 국제동향 등 새로운 환경정책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교육기능을 환경정책 확산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협력체계 형성
  - 환경정책 관련 학회, 매체별 전문 학회 등 학계·연구계와의 긴밀한 교류 지속(학회장 간담회, 공동연구사업 등 추진)
  - 전문 인력 양성, 그린캠퍼스 조성,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및 환경 정책연구사업 등 대학과의 협력사업 발굴·추진
  - 달라지는 환경정책이 학교교육으로 신속히 반영되도록 16개 시·도 교육청 장학관들이 참여하는 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
- ④ (지자체)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성공사례 확산 유도
  - 그린시티 수상 지자체 중심으로 그린시티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, 지역 환경브랜드 발굴 등 성공적 환경관리 사례 공유·확산

### 3) 민·관 거버넌스를 통한 주요 국제회의 유치·준비

#### ① G20 정상회의 개최국에 걸맞은 책임의식 공유 및 확산

- 정부 주도의 녹색성장 논의에 민간 참여 프로세스 확대
  - 환경장관회의 등 정부 간 환경회의와 산업계 회의를 연계·개최하여 민·관공조의 글로벌 녹색성장 거버넌스 모델 확산
  - \* G20 서울 정상회의는 비즈니스 서밋의 지속 개최를 지지하고, 비즈니스 서밋 주요 권고사항(녹색성장 등)을 정상선언에 반영
- 녹색성장 전략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로 전파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
  - UN 지속가능발전센터(UN경제사회국 소속, '11.6 개소)를 통하여 한국형 녹색성장 전략을 개도국에 교육·홍보
  - \* '12년 UN Rio+20 정상회의 시 녹색성장 전략을 핵심의제로 채택 제안
  - 동아시아, 중동, 아프리카, 중남미 등과 그린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여 환경협력 체계 강화 및 우리의 녹색성장 경험 전파

#### ② 범국민 참여를 통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적 개최 준비

- 세계 환경올림픽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(WCC)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민·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범국민적 참여 유도
  - \* 역대 총회 공식 참가자 : '96 몬트리올(3천명) → '00 암만(4천명) → '04 방콕(5천명) → '08 바르셀로나(7천명) → '12 제주(1만 명 예상)
- 총회준비를 전담할 민·관 합동 조직위원회 출범('11.1), 범정부 협력·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정부·실무지원위원회 개최(연 2회)
- 범국민 참여유도를 위하여 학계, 경제·산업계, 문화·예술계 등 7개 분야별 협력네트워크 구축('11.2)

- 숙박·교통·의료 등 부문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 한 총회 자원봉사단 구성·운영계획 수립('11.9)
- 지역의 우수 자연자원, 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한 총회 공식투어 (1만명) 프로그램 개발('11.6), 참가자 등록·숙소예약시스템 구축('11.12)

### ③ 민·관 협력을 통한 2012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·준비

- 2012년 개최되는 제18차 당사국총회(COP18)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ost-교토체제로의 전환점으로 전 세계의 관심 집중
  -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 예정인 COP18을 국민 참여 및 지지 속에 유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서 리더십 강화
- 민간·경제단체의 리더가 참여하는 민·관 합동 「COP18 유치 위원회」 및 유치 결정 후 「COP18 준비위원회」 구성·운영(연중)
  - COP18 유치·준비활동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 실천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사회의 핵심 화두로 정립

### ④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(CBD) 당사국총회(2014) 유치 추진

- CBD 총회 유치·준비활동을 계기로 한국의 녹색성장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내·외 인식을 제고하고, 생물다양성 분야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
  - \* '12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및 '14년 CBD총회를 유치·개최 시 Rio 3대 환경 협약(기후변화·생물다양성·사막화방지협약) 당사국총회를 모두 개최
- '14년 CBD 총회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남·남 협력 전문가회의 개최('11 상반기, 국립생물자원관), 생물다양성 국제기구 (IPBES) 설립 논의에 주도적 참여

## 4)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참여 및 그린리더십 강화

### ① 국제기구와의 녹색성장 비전 공유를 위한 협력 강화

- UNEP 주도의 녹색경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녹색성장 전략 및 정책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
  - \* UNEP는 한국의 녹색성장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녹색성장을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모범 사례로 평가('10.4)
- OECD 주도의 녹색성장전략 수립과 연계하여 한국의 선도적 정책·사례를 알리고, 각 국 실정과 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녹색성장모델 개발 지원
  - \* OECD는 '09년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녹색성장 선언문을 바탕으로 '11년도 각료회의('11.5) 시 녹색성장전략보고서 발표 예정
- '11년 UN의 세계 산림의 해 기념행사를 계기로 우리의 모범적 산림복원 경험과 녹색성장 정책·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홍보
- 청년층 우수인재에 대한 국제환경·녹색성장 교육 및 국제환경 기구에서의 인턴근무를 지원
  - \* '09년 14명, '10년 15명이 UNEP, OECD, GEF 등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근무

### ② 아·태지역 녹색성장 비전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

- UNESCAP과 공동으로 녹색성장 서울이니셔티브를 지속·확대하여 지역 내 녹색성장 리더십 발휘
  - \* 아·태환경과개발장관회의('10.9)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를 연장·시행하기로 결정
- 아세안+3 환경장관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(EAS)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의 녹색성장 지식·경험 공유

○ UNEP 아태지역사무소(ROAP)의 북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북한 지역의 환경관리 역량 지원

\* 북한이 우리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기피하고 있으나, UNEP을 통한 사업으로 협력 분위기 조성

○ 한·중·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3국간 녹색성장정책의 경험 공유, 정보 교류 등 협력 확대

- 3국의 정책연구기관, 공무원간 녹색성장 정책대화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, 환경장관회의와 연계하여 3국 산업계 지도자 간담회 개최방안 협의

### ③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녹색 ODA 단계적 확대

○ 개도국 대상 녹색 ODA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공단, 환경산업기술원, 환경정책평가원 등 환경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강화

\*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마스터플랜,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ODA 수요를 제고

○ 환경보전협회,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녹색 ODA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·지원

- ODA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체의 개도국 녹색투자 분야 진출 기회 확대

○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환경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 확보

-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현장·사례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개도국의 녹색성장 의지 제고

---

## 붙 임

---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. 2011년 주요정책 추진일정 ..... | 93  |
| 2. 2011년 주요 입법계획 .....   | 103 |
| 3.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..... | 108 |





1.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 |
|-------|-----|--|
| 1/4분기 | 2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온실가스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착수(8기/연 운영)</li> <li>○ 국가 정보 및 통계의 산정·검증절차 확립</li> <li>○ 녹색자동차보험 설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 구성</li> <li>○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건물 확대</li> <li>○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프로그램 사업 착수</li> </ul> |
|       | 3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Programatic-CDM사업(2건) 사업계획서 작성</li> <li>○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한 그린카드 보급사업 추진방안 마련</li> </ul>  |
| 2/4분기 | 4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Programatic-CDM사업 UN-CDM DOE 타당성 검토 의뢰(1건)</li> <li>○ 자동차에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 추진</li> </ul>   |
|       | 5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</li> </ul>   |
|       | 6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문별·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</li> <li>○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수립</li> <li>○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'1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</li> </ul>  |
| 3/4분기 | 7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심운행 시내버스를 CNG 하이브리드차로 보급 확대</li> <li>○ 전국단위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마련</li> </ul>  |
|       | 8월  |  |
|       | 9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립공원에 전기차를 활용한 생태 우수지역 청정운행 모델개발</li> </ul>   |
| 4/4분기 | 10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 온실가스·연비 규제 벌과금 부과 관련 규정(대기환경보전법) 국회 제출</li> <li>○ 녹색자동차보험 상세설계 및 시범사업 실시</li> </ul>   |
|       | 11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탄소제품 인증제도 도입</li> <li>○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소 구축</li> </ul>  |
|       | 12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수도설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·보급</li> <li>○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</li> <li>○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지침 마련</li> <li>○ 제주권역 대기오염 지상집중관측소 설치</li> </ul>  |

## 2. Me First 운동 확산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-|---|
| 1/4분기 | 1월  | ○ 군장병 연 25만명 대상, 녹색 교육과정 확대 및 맞춤형 교재개발<br>○ 환경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  |
|       | 2월  |   |
|       | 3월  | ○ RFID 기반 수거시스템 설치지원  |
| 2/4분기 | 4월  | ○ 제3회 기후변화 주간 행사<br>○ 종량제 정착을 위한 민·관 포럼 구성  |
|       | 6월  | ○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 수립<br>○ 「2011 녹색소비 주간」 운영<br>○ 부문별 그린리더 모집 및 양성(군대, 대학생)  |
| 3/4분기 | 7월  |   |
|       | 8월  | ○ 그린카드 도입을 위한 정부·지자체, 제조사, 온-오프 유통업체, 카드사 등과 MOU체결  |
|       | 9월  | 자   |
| 4/4분기 | 10월 | ○ 「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」 개최   |
|       | 11월 | ○ 4회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개최<br>○ 친환경 운전 안내 시스템(EMS) 보급   |
|       | 12월 | ○ 부문별 그린리더 모집 및 양성(기업, 실버, 주부)<br>○ 1000만 네트워크 구축(광역네트워크 소속단체 등)<br>○ 기후변화 교육센터 설치 및 그린리더 협의체 구성(16개 시도)<br>○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 |

## 3. 4대강 살리기와 물 관리 선진화

| 추진일정  |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|---|
| 1/4분기 | 1월 | ○ 인(TP)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('13.1~ 3대강, 한강)<br>○ '함께하는 4대강' 캠페인 추진 |
|       | 3월 | ○ 비점오염원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  |
| 2/4분기 | 4월 | ○ 유역구성원 중심의 지역단위 수질보전활동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5월 | ○ 친 환경적 친수활동 체험 프로그램 개발<br>○ 지류·지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            |
|       | 6월 | ○ 보(淵) 중심의 '총량관리 수질모델링' 개발 및 수질변화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|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 |
|-------|-----|--|
|       |     | ○ 물환경 관리비전 선포식 개최  |
| 3/4분기 | 7월  | ○ 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실시간 배출부하량 관리               |
|       | 8월  | ○ 수질 예보제 도입(16개 지점)  |
|       | 9월  | ○ 수생태복원 성공사례 콘테스트 개최<br>○ 정부합동 비점오염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          |
| 4/4분기 | 10월 |  |
|       | 12월 | ○ 16개 보 중심의 유역권 조정 및 목표수질 설정<br>○ 물 환경 관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 |

#### 4.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-|---|
| 1/4분기 | 1월  |   |
|       | 3월  | ○ 기후변화 적응 컨설팅단 구성   |
| 2/4분기 | 4월  | ○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연구단 구성  |
|       | 6월  |   |
| 3/4분기 | 7월  | ○ IPCC Working Group3 주 집필자 및 시나리오 전문가 회의   |
|       | 8월  |   |
|       | 9월  | ○ 전국 단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마련  |
| 4/4분기 | 12월 | ○ 5개 권역(제주권 등) 지상 집중 관측소 설치<br>○ 제3차 기후변화 대응 국가보고서 UN제출<br>○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<br>○ ASEAN 지역 적응 담당자 교육 |

## 5. 물산업 육성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 |
|-------|-----|--|
| 1/4분기 | 1월  | ○ 하수시설 통합관리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 |
|       | 2월  | ○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수행기관 선정<br>○ 하수도 기자재 기준 개선을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월  | ○ 물산업 종합정보 시스템 구성계획 수립   |
| 2/4분기 | 4월  | ○ 아프리카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|
|       | 5월  | ○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규칙 제정 및 인증 시행<br>○ 지역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  |
|       | 6월  | ○ 환경산업 우선진출지역 선정 및 해외진출전략 수립<br>○ 에코스마트 상수도사업단, 고도 수처리사업단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/4분기 | 7월  | ○ 병입수돗물 공급 도입방안 마련   |
|       | 8월  |  |
|       | 9월  | ○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 |
| 4/4분기 | 11월 | ○ 먹는샘물 국가 단일브랜드 네이밍·로고 개발  |
|       | 12월 | ○ 2개 권역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협약 체결<br>○ 하수도법 개정(하수처리시설 전문 수탁관리업 등록제 도입 등)<br>○ 물산업 통계 시범조사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 |

## 6. 생물자원 확보·이용

| 추진일정  |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|---|
| 1/4분기 | 1월 | ○ ABS 상담센터(Help Desk)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월 | ○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·육성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월 | ○ 생물자원 전문 인력 양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/4분기 | 5월 |   |
|       | 6월 | ○ 생물다양성 정책 통합 근거법령 제정안 국회제출<br>○ 범국가적 차원의 ABS 후속대책 수립 |
| 3/4분기 | 7월 |   |
|       | 8월 | ○ 생물유전자 분류군별 전문가 양성계획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-|---|
| 4/4분기 | 11월 | ○ 생물다양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 |
|       | 12월 | ○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보완<br>○ (가칭)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|

## 7. 자원순환성 제고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-|---|
| 1/4분기 | 1월  |   |
|       | 2월  |   |
|       | 3월  | ○ 자원순환특화단지 2단계 사업 착수  |
| 2/4분기 | 4월  | ○ 수도권매립지 환경관광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 |
|       | 5월  | ○ 건설폐기물 재활용 홍보자료 배포<br>○ 생활계 유가자원 수거·재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  |
|       | 6월  | ○ 포장재 재질·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<br>○ 소형가전제품 및 폐휴대폰 분리배출제 도입<br>○ 수도권매립지 자동차연료화시설 준공 및 시범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/4분기 | 7월  | ○ 대규모 고물상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   |
|       | 8월  |   |
|       | 9월  | ○ 폐전자제품·자동차 재활용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<br>○ 포장재 재질·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평가위원회 구성  |
| 4/4분기 | 10월 | ○ 건설폐기물 재활용관련 견학프로그램 운영<br>○ 수도권매립지 및 경인아라뱃길 연계 에코투어 운영<br>○ EPR 품목 재질별 재활용 기준비용 차등화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1월 | ○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<br>○ 판매업자의 폐제품 회수·인계의무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|
|       | 12월 | ○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방안 개선방안 마련<br>○ 포장재 재질·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<br>○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표준비용 기준(안) 마련<br>○ 순환골재 사용 의무대상기관 확대방안 마련 |

## 8. Top 환경기술 개발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-|---|
| 1/4분기 | 1월  | ○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월  | ○ 글로벌 탑 기술개발사업단 사업단장 모집 공고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3월  | ○ '글로벌 탑 기술개발사업'사업단장 선정<br>○ '11년 환경 R&D 과제선정 |
| 2/4분기 | 4월  | ○ 웹기반의 상시 과제 제안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5월  | ○ 글로벌 탑 기술개발사업단 발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6월  | ○ 국제환경기술 전시회(ENVEX2011) 개최                    |
| 3/4분기 | 8월  |   |
|       | 9월  | ○ 해외기술 사업화 상담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/4분기 | 11월 | ○ 차세대 Eco-Innovation 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최종 보고회       |
|       | 12월 | ○ 환경R&D '중장기 Eco-로드맵' 수립<br>○ 국가녹색기술대상 포상     |

## 9.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

| 추진일정  |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|---|
| 1/4분기 | 1월 | ○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정망 구축<br>○ 폐기물 부담금 개선대책 시행<br>○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<br>○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감기 기상지수 제공<br>○ 생활소음·진동 피해배상수준 상향(30%) 조정       |
|       | 2월 | ○ 유형별 "저탄소 녹색도시"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<br>○ 상수도 미보급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 무료지원 MOU 체결<br>○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추진계획 수립<br>○ 환경보건 점검·개선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|
|       | 3월 | ○ 위생안전기준 인증센터 구축<br>○ 하수관거·빗물펌프장 강우확률빈도 상향조정 등 하수도 시설기준 확정<br>○ 민감계층 환경노출 저감을 위한 생활가이드라인 보급<br>○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현황과약<br>○ 하수관거 등 하수도 시설기준 확정 |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 |
|-------|-----|--|
|       |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계획(안) 수립</li> <li>○ 중고가구의 저소득층 무상지원 및 주택 리모델링 지원</li> </ul>   |
| 2/4분기 | 4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</li> <li>○ 상수관망 정비 종합계획 수립</li> <li>○ 도심 천연샘물 음용화 추진방안 마련 연구사업 착수</li> <li>○ 천리안 위성 정규서비스 실시</li> <li>○ 환경보건 바우처제도 도입방안 마련</li> <li>○ 수도권매립지 환경관광명소화 위원회 구성 및 마스터플랜 수립</li> </ul>  |
|       | 5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도용 자재·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</li> <li>○ 위생안전기준 시행규칙 제정</li> <li>○ 뉴 미디어를 이용한 지진정보 제공</li> <li>○ 기술 및 재정 지원, 평가 등 통합적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○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확충계획 수립</li> </ul>   |
|       | 6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규모 하수처리에 적합한 최적공법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</li> <li>○ 하수도 CSOs 및 악취개선방안 마련 시설별 현황 파악</li> <li>○ 황사·폭염 등 보건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</li> <li>○ 외국인 생태관광 및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</li> <li>○ 지역단위 및 국제적 생태관광 지원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○ 주문자 방식의 기상서비스 제공</li> <li>○ 강우강도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호우특보 기준 정비</li> <li>○ 범정부 나노물질 안전관리대책 수립</li> </ul> |
| 3/4분기 | 7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상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통기상지수 제공</li> <li>○ 고해상도 재해기상 국지 상세 예보모델 구축</li> </ul>  |
|       | 9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도 CSOs 및 악취개선방안 마련 성능개선 매뉴얼 작성</li> <li>○ 지역단위 및 국제적 생태관광 지원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○ 악취 측정 및 성능개선 매뉴얼 작성</li> <li>○ 한국형 REACH제도 법안 국회제출</li> <li>○ 예보관 모의훈련 시스템 및 훈련교재 개발</li> <li>○ 가전제품 소음관리위한 전문가 포럼</li> <li>○ 조명환경관리구역 선정방안 마련</li> <li>○ 국가 기후지도 개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/4분기 | 10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도 CSOs 및 악취개선방안 마련 지자체 보급</li> <li>○ 수도권매립지 테마별 투어코스 개발</li> <li>○ 유해물질 노출 권고기준 도입방안 전문가 설명회</li> <li>○ 슬레이트 관리 통합지침(안) 마련</li> </ul>   |



| 추진일정 |     | 추진계획   |
|------|-----|--|
|      | 11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해물질 노출 권고기준 마련 도입방안 마련</li> <li>○ 기상레이더 합성 강우량 산출</li> <li>○ 국가 기후자료 웹서비스 체계 구축</li> <li>○ 과거 유사사례 일기도 검색시스템 구축</li> </ul>   |
|      | 12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마련</li> <li>○ 오존현상 빈번 발생지역에 오존 예보모델 개발</li> <li>○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적 조정</li> <li>○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</li> <li>○ 석유정제업 HAPs 시설관리기준 도입 법제화 추진 및 철강업 HAPs 시설관리 기준(안) 마련</li> <li>○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안) 국회제출</li> </ul> |

## 10. 환경규제 선진화

| 추진일정  |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|---|
| 1/4분기 | 1월 |   |
|       | 2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접개발 적용범위 기준(안) 마련</li> <li>○ 스크리닝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</li> <li>○ 국가오염부지 목록 작성 추진방안 수립</li> </ul>   |
|       | 3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성평가협의회 구성 및 가이드라인 마련</li> </ul>  |
| 2/4분기 |    |   |
|       | 6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영향평가 스코핑제도 운영실태 분석·평가</li> <li>○ 환경영향평가 부실평가서 판단기준 구체화</li> <li>○ 산업수질 관리체계 근거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안 정비추진</li> <li>○ 산업폐수 新 인허가제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정</li> <li>○ 국립공원 주민지원방안 마련</li> <li>○ 장항제련소 토양관리단지 시범사업 실시설계 종료</li> <li>○ 토양·지하수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 시범사업 추진</li> </ul> |
| 3/4분기 | 8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연공원법 분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</li> </ul>   |
|       | 9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소 고시 개정안 마련</li> </ul>  |

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-|---|
| 4/4분기 | 10월 | ○ 소규모 유기성 폐수 직접유입 등 배출시설규제 개선지침 마련  |
|       | 11월 | ○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 적용 대상기업 확대  |
|       | 12월 | ○ 상수원보호 관련 지형도면 고시(호남권)<br>○ 수질 TMS 설치대상 시설을 축산폐수 및 3종 사업장까지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<br>○ 오염우심지역 관계기관 합동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<br>○ 국립공원 관리체계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령정비 착수<br>○ 녹색 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시범운영<br>○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 마련 |

## 11. 환경법질서 확립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 |
|-------|-----|--|
| 1/4분기 | 1월  | ○ 굴뚝자동측정기 원격정도 프로그램 개발<br>○ 수도요금 합리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 |
|       | 2월  | ○ 삭도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|
|       | 3월  |  |
| 2/4분기 |     |  |
|       | 6월  | ○ 유사경유 유통방지를 위한 대기법 시행규칙개정<br>○ 대형폐기물 수거·재활용 체계 개선(관련지침 개정)<br>○ 수도요금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<br>○ 수도 사업 평형기금 설치방안 마련 |
| 3/4분기 | 7월  | ○ 음식물류 폐기물 대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   |
|       | 8월  | ○ 첨가제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기법 개정안 국회제출  |
|       | 9월  | ○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 전산화 방안 수립<br>○ 지자체 적정 수도요금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|
| 4/4분기 | 10월 | ○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정 개정(안) 마련   |
|       | 11월 | ○ 그린패스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법 개정<br>○ 국립공원 입장료 재징수 방안 국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<br>○ 표준급수조례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12월 | ○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자율관리체계 구축  |

## 12. 환경거버넌스 구축

| 추진일정  |     | 추진계획  |
|-------|-----|---|
| 1/4분기 | 1월  | ○ 지자체·공공기관 공동 참여 우수기술 실증화사업 추진<br>○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민·관 합동 조직위원회 출범<br>○ 생물다양성 남·남협력 전문가회의 개최(생물자원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월  | ○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7개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|
|       | 3월  | ○ 녹색성장을 위한 시·도 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·운영  |
| 2/4분기 | 4월  |   |
|       | 5월  |   |
|       | 6월  | ○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공식투어 프로그램 개발<br>○ 그린시티 협의회 구성<br>○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개최<br>○ 중국 북경 국제환경박람회 연계 성과세미나 개최<br>○ UN지속가능발전센터 개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|
| 3/4분기 | 7월  |   |
|       | 8월  |   |
|       | 9월  | ○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자원봉사단 구성<br>○ 국제환경지수 개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|
| 4/4분기 | 10월 | ○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투자&규제 로드맵 마련   |
|       | 11월 | ○ 1:1 기술후견인제 대상업체 및 후견기관 선정<br>○ 제11회 한중일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회의('11.11, 일본)  |
|       | 12월 | ○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등록 예약시스템 개발<br>○ 글로벌 그린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 |

□ 개요 : 총 19건

○ 제정 및 개정법률 현황

- 제정 :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 등 3건
- 개정 :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등 16건

○ 국회제출 시기별 현황

- 임시국회(2월~8월) : 「수도법」 등 14건
- 정기국회(9월~) :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」 등 5건

○ 주요 내용별 현황

- 국정과제 추진 관련 : 1건

- \* 폐기물관리법(친환경 음식문화 조성)

- 법률 선진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법률 정비 : 2건

- \*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(제정), 4개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정)

- 환경정책 선진화 및 규제개선 등 : 16건

·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 강화: 7건

- \* 생물다양성 보전·이용법, 환경영향평가법, 유해화학물질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·수생태계 보전법, 먹는물 관리법, 하수도법 등

· 자원순환사회 정착 : 1건

- \*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
· 국민 불편 해소 등 : 8건

- \*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,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

□ 세부 내용

| 법안명  | 주요 내용  | 추진일정  |
|--|--|---|
| 수도법<br>(일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수도사업 인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·변경 등을 시·도로 이양</li> <li>○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사용량 정보표시제도 도입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법제처제출 : 10년12월 31일</li> <li>○국회제출 : 2월 28일</li> <li>○시행 : 12년 4월</li> </ul> |
| 생물다양성<br>보전 및<br>이용에 관한<br>법률(제정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·이행</li> <li>○국내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동에 대한 관리</li> <li>○외래종 관리의 기본방침 마련 및 사전예방·사후관리를 통한 외래종 관리 체계 구축</li> <li>○생물다양성협약(CBD)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</li> <li>○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생태계 복원 추진 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법제처제출 : 10년12월 31일</li> <li>○국회제출 : 3월 31일</li> <li>○시행 : 13년 1월</li> </ul> |
| 환경분야<br>시험·검사<br>등에 관한<br>법률(일부)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일반국민에 대한 형식승인 제·개정 신청권 부여 및 형식 승인 유효기간 신설 및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</li> <li>○“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”에 관한 규정을 동 법률로 이관 (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) 및 관리강화</li> <li>○전량 수출목적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법제처제출 : 1월31일</li> <li>○국회제출 : 3월 31일</li> <li>○시행 : 공포후 6개월</li> </ul>     |
| 4대강수계<br>물관리 및<br>주민 지원<br>등에 관한<br>법률(제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4대강 수계법상 각 규정을 “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”에 통합하여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존 한강수계법, 낙동강수계법, 금강수계법, 영산강·섬진강수계법은 폐지</li> </ul> </li> <li>○낙동강수계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설치, 폐수의 재이용 등 독자적인 조항 유지</li> </ul>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법제처제출 : 2월20일</li> <li>○국회제출 : 4월 20일</li> <li>○시행 : 12년 9월</li> </ul>      |
| 토양환경<br>보전법<br>(일부)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, 토양정화업 등록(변경) 등 관련 업무를 시·도로 이양</li> <li>○오염토양을 「농지법」에 따라 토양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도 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토양정화 기준 적용 등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법제처제출 : 2월 28일</li> <li>○국회제출 : 4월 30일</li> <li>○시행 : 12년 9월</li> </ul>     |

| 법안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 추진일정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자연환경보전법(일부)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등의 등록·관리 근거 마련</li> <li>○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(10억) 삭제 및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</li> <li>○ 전국 자연환경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2월 28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4월 30일</li> <li>○ 시행 : 12년 9월</li> </ul> |
|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(일부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공표시기를 '매 회계연도 시작 전'에서 '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'로 조정</li> <li>○ 과태료 부과·징수 등 국가사무를 시·군·구청장에게 이양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4월 20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6월 20일</li> <li>○ 시행 : 12년 1월</li> </ul> |
|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일부)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·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</li> <li>○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4월 30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6월 30일</li> <li>○ 시행 : 12년 7월</li> </ul> |
| 환경영향평가법(일부)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칙 제2조(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·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 3년을 삭제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5월 20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7월 20일</li> <li>○ 시행 : 12년 1월</li> </ul> |
| 하수도법(일부)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근거 마련</li> <li>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 위탁관리업 등록제 도입</li> <li>○ 불량정화조 유통근절을 위한 판매금지 조항 마련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5월 25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7월 25일</li> <li>○ 시행 : 12년 6월</li> </ul> |
|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(일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·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을 단축(30→20일)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5월 31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7월 31일</li> <li>○ 시행 : 12년 1월</li> </ul> |

| 법안명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 추진일정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대기환경보전법* (일부)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등이 첨가제로 사용되지 않도록 첨가제 정의규정을 명확화</li> <li>○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과금 부과 등 제재근거 규정 마련</li> <li>○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</li> <li>○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(시·도지사) 또는 사업자로 함</li> <li>○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국가사무를 시·도지사에게 이양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6월15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8월15일</li> <li>○ 시행 : '12년 6월</li> </ul>   |
|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(일부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근거 마련</li> <li>○ '수질통합관리센터'의 설치 근거 및 기능 등을 명확히 규정</li> <li>○ 일부 과태료 조항 폐지 등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6월30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8월 31일</li> <li>○ 시행 : '12년 6월</li> </ul>  |
| 소음·진동관리법 (일부)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등급 표시제 도입</li> <li>○ 소음·진동종합대책 수립 근거 마련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6월 30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8월 31일</li> <li>○ 시행 : 공포후 6개월</li> </ul> |
|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*(제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법적 근거 마련</li> <li>○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등록 의무를 기존 화학물질 (일정 기준 부합)까지 확대</li> <li>○ 발암물질 등 특정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용도별 허가·제한제도 신설</li> <li>○ 화학물질 취급하는 자의 정보제공 의무화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6월15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9월 15일</li> <li>○ 시행 : '13년 1월</li> </ul>  |
| 유해화학물질관리법 (일부)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학물질 확인 및 유해성 심사 제도를 삭제하고 별도의 법률 제정<br/>※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(제정)</li> <li>○ 취급제한·금지물질 영업 허가제도 폐지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제처제출 : 7월 15일</li> <li>○ 국회제출 : 9월 15일</li> <li>○ 시행 : '13년 1월</li> </ul> |

| 법안명  | 주요 내용  | 추진일정  |
|--|--|---|
| 폐기물<br>관리법(일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</li> <li>○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무게 계근·정보 전송 등 RFID 기반 수거체계 구축</li> </ul>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법제처제출 : 7월 25일</li> <li>○국회제출 : 9월 25일</li> <li>○시행 : 공포후 6개월</li> </ul>  |
| 먹는물<br>관리법<br>(일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</li> <li>○영업정지를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법제처제출 : 8월 10일</li> <li>○국회제출 : 10월 10일</li> <li>○시행 : 공포후 6개월</li> </ul> |
| 전기·전자<br>제품 및<br>자동차의<br>자원순환에<br>관한 법률<br>*(일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재활용부과금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</li> <li>○폐전기·전자제품 대상범위 확대, 의무율 부과방식 등 자원순환체계 개선</li> <li>○자동차 제조·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 강화 등 자원순환체계 개선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법제처제출 : 8월 20일</li> <li>○국회제출 : 10월 20일</li> <li>○시행 : 13년 1월</li> </ul>  |

**①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 창출**

- (4대강 살리기 환경대책)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, 수질오염 감시·방제, 안전한 취·정수대책, 환경평가 사후관리체계 구축, 공구별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 및 4대강 外 국가하천 환경대책 마련 추진
  - 하수·폐수(711개)·가축분뇨(21개)처리시설 확충 및 인·처리시설 보강('10, 1.3조원), 인공 생태습지(135곳) 및 친환경 어도(33곳) 조성
  -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구축·운영('10.6), 취수시설(26개) 이전·개보수, 사후관리조사단 운영('09.12~)
  - 주요 공사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('10.1~)
- (샛강·실개천 수생태 건강성 회복) 샛강·실개천 수생태 건강성 회복, 오염원 관리 및 유역관리 강화
  -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마련('10.8),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(104개소) 복원 및 청계천+20사업('10년 19개소) 추진
  - 4대강유역 기업-지자체 1사1하천운동 활성화 및 전국 380개 하천(800개 지점)의 수생태 지도 제작 및 측정망 구축('10~'12)
  - 하천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BOD에서 COD(또는 TOC)로 전환('10.10)

**②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**

-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, 물재이용 및 물절약 촉진, 수돗물 품질 제고 및 취약지역·서민층 물복지 향상
  - 영세한 소규모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고, 누수진단, GIS 등 과학적·체계적 상수관망 정비로 우수율 제고 추진



- 빗물, 중수도, 하·폐수 재이용 등 물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하고, 업종·제품별 물 사용량정보 공개제도(Water Footprint) 도입('10.12)
- 고도정수처리 도입율을 단계적으로 확대('07, 21.5% → '12, 30%) 하고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(3개소),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 집중투자('10, 상수도 2,246억원, 하수도 1,981억원)
- 구제역 발생지역 지방상수도 보급예산 지원('10.8, 22,455백만원)

### ③ 자연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

- 도시지역 쾌적성 제고를 위한 녹지·친수공간 확충, 생태관광 활성화 및 선진 생물자원관리체계 등 구축
  -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 확대('10.12), 녹색길 조성(대구·강릉 25km) 등 친수공간 확보,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 완충 녹지 조성사업 추진(시화·반월·당진 등 6개 산업단지)
  - 보호지역 지정·확대('10.10 기준 4개소 추가), 지질공원제도 도입('10.11),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종합대책 수립('10.11)
  - 5대 광역생태축 관리대상지역 선정(52,487km<sup>2</sup>) 및 관계부처 합동 훼손·단절지역 복원대책(안)을 마련('10.12)하고, DMZ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 종합대책(안) 수립('10.5)
  -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선정('10.2), 북한산 탐방휴향시설 조성('10.8, 착공), '4대강 생태관광자원 50選 및 탐방코스 10選' 선정('10.2), 소외계층 대상 '생태관광 바우처 제도'를 시행
  - 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('10.8), 야생동식물 유전자은행 설치('10.9),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 확대('09 1,137종 → '14 3,000종) 및 유전자원 국제레짐(ABS)협상에 적극 대응

#### ④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

- (친환경 음식문화) 종량제 방식으로 수거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수거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('10.8)하고, 주요 발생원별 특성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추진
- (폐자원 순환 촉진) 자원순환사회 조성기반 강화,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폐자원에너지화 추진
  - 지역단위 자원순환망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('10.12),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(EPR) 10년 성과평가 및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 구축, 100만대 수거 캠페인 실시('10.4~7)
  -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확충(30개소),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 착수 등 폐자원·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을 본격 추진
- (폐기물관리 선진화) 지자체 청소행정 효율화 및 유해폐기물관리강화,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추진
  - 청소 대행비용의 원가산정 기준 개선, 대행계약 및 지출내역 공개기준 마련 등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 추진
  -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·처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('10.7), 폐기물 수출입·운반·처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('10.12)
  - 새봄맞이 대청소에 34천여개 기관(121만명)이 참여하여 26천톤 쓰레기를 수거하고, G20 정상회의를 즈음하여 매일 첫째 수요일 클린데이 운영(행안부 공동)

#### 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(WCC) 유치 계기 환경선진국 도약

- 총회 준비·지원의 법적기반 구축, 전담조직 구성·운영, 국·내외 협력강화 및 한국적 의제개발

-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('10.5) 및 시행령('10.8) 제정, 조직위원회 구성(정부·국회·민간위원 등 40명, '10.12 창립총회) 및 정부지원위원회 구성('10.9)
- 총회 재정지원, 비자·면세 등 세부 지원 사항을 규정한 한-IUCN MOU 체결('10.10), 총회 주제 결정을 위한 IUCN 총회준비위원회 참석('10.11, 스위스 클랑)
- (환경분야 국격향상) 국격제고 실천과제 발굴 및 환경규제 선진화 추진, 환경분야 국제협력 강화
- 환경분야 국격제고 실천과제 발굴·추진('10.3, 15개 실천과제), 환경성과지수(EPI)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 수립('10.6) 및 UNEP 한국녹색성장보고서 발표('10.4)
- 총량제를 전제로 공장 입지규제를 자연보전권역은 면적기준에서 부하량 기준으로,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배출량기준에서 부하량 기준으로 전환 추진('10.8,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)
-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Post-2012 기후 변화 체제에 관한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, 한·중·일 환경장관회의, 개도국과 환경협력 MOU 체결 등 지역 및 양자 환경협력 강화

## ⑥ 저개발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

- 축적된 기술·경험 전수, 개도국 지원기반으로서 국내 환경기술·산업 육성
- 국내 환경산업 해외진출과 연계한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(ODA) 지원규모 확대, 차세대사업('01~'10, 1조원) 후속 Eco-Innovation 기술개발사업계획('11~'20, 1.5조원) 수립('10.10)
-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Test-Bed 구축('10.6 영등포 정수장 막분리 고도정수처리, '10.9 수도권매립지 폐자원에너지화)

## ㉞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

- (ANAPARA\* 프로젝트) 석면피해예방·구제제도 확립, 나노물질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, 분진 건강피해 예방대책 및 조사확대, 라돈 실태조사 및 고노출시설 관리체계 마련
    - \* Asbestos(석면), Nano-material(나노물질), Particulate(분진), Radon(라돈)
  - 「석면피해구제법」 및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정으로 석면대책의 법제적 기반 완비, 농어촌의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사용실태 조사 및 비용효과적인 처리·지원방안 마련('10.12)
  - 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계획 수립('10.3), 국내 유통 나노물질 인벤토리 구축('10~'12), 나노물질(은나노 등 5종) 독성정보 생산 및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 운영
  - 미세먼지 PM2.5 대기질 환경기준안 입법예고('10.10), 시멘트 공장(4개소) 주민건강조사 및 석회석광산 주변 개황조사('10.4~)
  -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('10.1), 실내라돈농도 실태조사를 통한 전국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관리지침 개발, 라돈 저감시공 시범사업('10.4~'11.2, 5개소) 실시
- (어린이 환경안전관리) 유해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,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체계 구축, 새집·현집 증후군 제거를 위한 실내환경 개선
  - 유해물질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문구·완구·가구 등 주요 업종별 자발적 협약 체결('10.5), 친환경 안심 놀이터·보육시설·유치원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('10.12), 환경보건생활수칙 개발('10.12)
  - 아토피 장기체류형 '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센터' 건립지원('10, 진안·보성), 아토피 전문 환경보건센터(3개소) 운영

-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서비스 확대(1,200가구), 「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관리대상 확대(영화관·전시장·호텔·학원·PC방 등 추가)
- (환경보건정책 기반) 인프라 정비 및 조사연구체계 확립, 유해 화학물질 관리강화, 생활환경 위해요인 대응 강화
  -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('10.12),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안 마련('10.12),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국민건강 영향을 추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('10.1)
  -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('09~'11, 20세 이상 6천명), 유해화학물질 중 국가우선관리 대상물질 목록 마련 및 관리방향 설정('10.11)
  - G20 정상회의 대비 화학사고·테러 대응체계 강화, 취급제한·금지물질 사전예고제 도입('08.5, '11.6 시행)의 후속조치 마련
  - 산업계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제한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('10.3, 1개 조합 23개 기업), 어린이·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 보급('10, 도서관·독서실 등)
  - 서울·부산 지하철 석면뿜칠 제거 및 환기설비 개선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(서울 4개 역사 180억원, 부산 20억원)
  - 관계부처합동 제2차 「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('11~'15)」 수립 등 사전 예방적 소음관리기반 강화('10.12)

## ⑧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

- (Me First) 부문별 녹색생활 시스템 구축, 녹색생활 홍보·교육
  - (가정)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, 녹색가정 인증 시범사업 추진('10.3~, 3개 지자체)

- (건물) 공공건물(1만㎡ 이상)에 대한 환경성인증 의무화('10.6), 환경성인증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(개소당 평균 15백만원)
- (상업) 지자체 녹색구매조례('09, 80개 → '12, 120개) 제정 및 탄소 성적표지제도('10.8 현재, 234개, '10 280개) 확대, 그린스토어 인증제도 도입('10.6)
- (교통) 천연가스차('10, 2,700대)·하이브리드차('10, 1만대)·공회전제한장치 시범 부착사업(인천·경기 시내버스 등),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(수도권지역 충전소 16기 설치) 추진
-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확대, 1사 1녹색운동 등 민·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운동 전개
- 온실가스 배출을 진단하고 감축방안을 컨설팅해 주는 그린리더 육성('10, 1만명),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 성장교육 확대
- (기후변화 대응기반) 온실가스 관리기반 강화,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, 기후변화 감시·적응기반 강화, 온실가스 감축사업 본격화
  -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「온실가스종합 정보센터」 설립('10.6), 1km 해상도 태양광에너지 자원지도('10.12) 및 태양판 유지·관리 기상정보 개발
  -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, 자동차 온실가스기준 및 연비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추진('10.4~)
  - 행정계획·개발사업의 수립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시행('10.1), 극지기후변화감시소(남극) WMO 지정('10.12), 지역기후모델 구축('10.9), 한국판 Stern보고서 발간('10.12) 등
  - 전국단위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('12),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역량 지원(2개 지자체)

-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(물억새·목백합 등)을 식재하여 경관 창출, 수질오염 정화와 함께 탄소흡수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
- 매립지,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('10, 매립장 2개소, 재활용센터 1개소)

## 9]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

- (새만금) 생태환경용지 활용방안 구상, 선제적 환경관리대책 추진
  - 인간-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생태환경용지 활용 계획('10.9)과 생태복원·관광 마스터플랜('10.12) 수립
  - 농업용에서 친수용으로 전환된 새만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기 수립된 수질개선대책 보완('10.12)
  -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을 위한 자원·에너지관리방안('10.1) 마련 등
- (수도권매립지) 세계 최대 신·재생에너지 생산기지 건설, 기후 변화 대응 선도모델 창출, 국제적인 환경 관광명소로 브랜드화
  - 수도권 환경·에너지종합타운 조성('17) 지속 추진, 세계최대의 매립가스발전소(50MW) CDM사업 추진('07.4~'17.4, 약 1,100억원)
  - 입지적 이점, 유휴부지(종료매립장), 주변시설을 활용한 세계적 관광단지(쓰레기장→생명복원의 테마파크) 개발('14)
- (단양권) 지역별로 발생한 폐자원을 지역내·외에서 자원화하는 지역특화 자원순환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('10~'11)
  - 지역·업종별로 자원흐름을 분석하고 자원순환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폐자원 수급정보 DB화 추진('10~'12)
- (창원권) 생태관광 및 에코컨벤션산업의 특화지역으로 육성,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·인프라 지원

- 국가습지센터 조성('09~'11), 따오기 복원('09~'18), 우포늪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, 대평늪·주남저수지·부곡온천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코스 개발
- 람사르총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환경분야에 특화된 에코 컨벤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·지원
-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용자전거 시스템,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프로그램·인프라 집중지원
- (강릉시) 강릉시 녹색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조성, 기존도시 녹색화 표준모델 수립 및 전국적 확산추진
  - 녹색광장(11.5천㎡)·녹색거리(1.5km), 랜드마크 상징물 등 강릉시 녹색도시 선도사업 추진('11~'12)
  - 전기자동차·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, 신재생에너지, 물 재이용, 도시경관의 녹색디자인 등 본사업 추진('10.10~'16.12)
  - 시범도시 사례 전파 및 녹색도시 조성모델 개발('10.12)을 통해 기존도시의 녹색도시화 전환 유도

## 10 선진국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

- (기상예보 국민만족도 증진) 기상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민생활 밀착형 기상서비스와 전달매체 확대로 국민체감 만족도 향상
  - ※ 국민체감 만족도 : '08 63.2% → '09 69.8% → '10 81.9%
  - 슈퍼컴 3호기 도입 및 통합수치모델 현업 운영, 해상 파고부이(7대) 및 환경·기상공동감시망 확대(5개소), 지자체 공동협력관측소 설치(6개소)
  - 동네예보 및 해양기상 모바일서비스('10.8), 꽃가루농도 위험지수, 도시 고온건강지수(7대도시), 이안류 사전정보 등 생활 기상정보 제공



- 트위터, 미투데이 등 뉴 미디어를 통한 기상정보 제공, 지역산업과 연계한 ‘기후변화와 미래포럼’ 개최(10회), 초단기예보 제공('10.6)
- (위험기상 대비 능력 강화) 태풍·황사 감시 및 예측 능력 강화,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, 해양 감시체계 및 서비스 강화
  - ※ 황사예보정확도 : '08 62.8% → '09 66.2% → '10 71.4%
- 태풍예보기간 연장(3일→5일), 천리안 위성의 성공적 발사·운용('10.6), 지역별 대설특보구역 세분화 및 한파특보기준 개선('10.12), 사계절 황사예측시스템 개선('10.2)
- 지진 조기경보분석 시험용 알고리즘 개발(12월),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방재관측 신설(서해안 6개소) 및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제공(매월)
- (기상행정 선진화 추진) 레이더 기상관측 망 최적화, 예보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, 기상·수문·기후자료 통합관리체계 구축, 기상자원 조절기술 실용화 등 미래도약 기반 강화
- 기상레이더센터 신설('10.4) 및 범국가적 기상·강우레이더 공동 활용을 위한 융합행정 MOU 체결('10.6, 국방부·국토부·행안부·기상청)
- 예보관 모의훈련시스템 구축('10.12),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('10.11, 26개 기관), 인공강우 실험(평균 인공 증우량 63% 향상)
- 개도국 녹색성장 및 기상기술 전수(40개국 64명) 및 기상협력 다변화

## [참고] 총리실 3/4분기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

- (총괄) '10년도 연두 업무계획의 45개 세부추진계획 중 38건은 정상추진이나, 7건(15.5%)은 계획 일정보다 추진일정 일부 지연
- (지연 원인 및 향후 전망) 지연 원인은 추진여건 변화에 따른 지연 5건, 법률 제·개정 2건임
  - 3건은 연내 완료 예정이며, 2건은 '11년으로 추진시기 조정
    - ① 전남권·경북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착수(7월)
    - ② 수도권매립지내 자연력에너지타운 공모(6월)
    - ③ 국가 종합지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수립(8월, 기상청)
    - ④ 글로벌 녹색관광명소화 개발계획 용역 완료 및 실행계획 수립(7월 → '11년 업무계획 반영)
    - ⑤ 전주권 자원순환지원센터 지정(7월→ '11년 업무계획 반영)
  - 관련법안 2건 국회 계류 중
    - ① 석면안전관리법 제정(6월) : 국회 제출(10월)
    - ②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회제출(7월) : 국회 제출(11월)
- (향후 계획)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협의, 대국회 설명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연과제를 완료토록 노력



